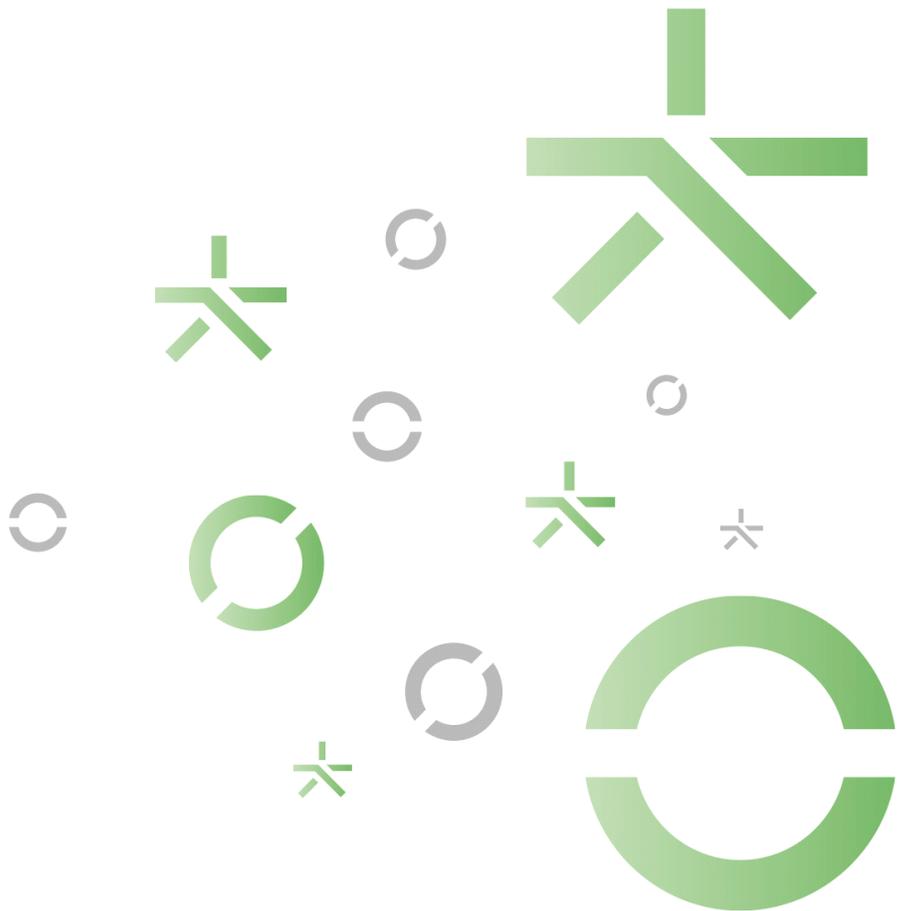


인천시 청년 참여 현황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김정욱·안지선



연구책임

김정옥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연구참여

안지선 도시사회연구부 전임연구원

본 연구 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개요

- 본 연구는 인천시 청년들의 참여 정도를 분석하고, 참여제도 운영상의 개선 및 보완점을 분석하여 인천시 청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인천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참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분석하고,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 등이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함.
 - 인천시 청년들의 지역참여 및 참여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시 청년정책의 참여 분야 정책 방안을 제시함.

2. 참여에 대한 이해

- 본 연구는 정치과정이나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이나 사회의 문제 또는 쟁점에 대한 의견제시, 소통 및 행동 등으로 참여하는 행태 등을 시민참여의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함.
 - 본 연구는 청년의 참여제도를 조사하고,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인 만큼 청년정책의 참여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참여를 정의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참여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위원회 및 네트워크),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도모하는 사업(네트워크 및 공동공간)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참여는 영역에 따라 정치참여, 시민참여, 정책참여로 유형화할 수 있음(주성수, 2004).
 - 정치참여는 정치적 특성을 갖는 영역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 사회참여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함. 활동이나 행동이 정치적인 성격 또는 목표 등과 관련 있을 때, 정치참여로 분류하고, 그 외는 사회참여로 구분함.

- 정책참여는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를 뜻함.

3. 청년 참여 부문 제도

[요약 표 1] 청년 참여제도 사례 종합

구분	서울	인천	광주	경남	제주		
제도	청년 조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기본 • 청년창업 지원 • 청년공간 설치 운영 • 청년참여 활성화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 청년 주거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 청년 예술인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기본 • 청년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기본 • 청년창업 지원 • 청년기업 육성 지원 •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 청년일자리 창출 • 청년 프리랜서 지원 • 청년 예술인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기본 • 청년창업 지원 • 청년시설 운영 지원 • 청년농어업인 육성 •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 청년 주거 지원 • 청년 생활안정 지원 • 청년 문화예술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기본 • 청년농업인 육성 •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 청년 문화예술 육성 지원 • 청년활동 지원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 청년기금 설치 운용 • 청년대상 	
	청년의 범위	만 19-39세	만 19-39세	만 19-39세	만 19-34세	만 19-39세	
	비전	다시 뛰는 서울, 기승 뛰는 청년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시민 중심도시 광주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활기찬 제주 청년, 더 밝은 미래	
	추진과제수	48건	80건	84건	117건	94건	
	참여 부문	7건 (14.6%)	7건 (8.8%)	10건 (11.9%)	16건 (13.7%)	20건 (21.3%)	
	청년예산 규모	9,282억원	891억원	871억원	1,182억원	582억원	
참여 부문	145억원 (1.6%)	24억원 (2.7%)	19억원 (2.2%)	77억원 (6.5%)	24억원 (4.1%)		
담당 조직	행정(1)부시장 보좌기구 미래청년기획단	일자리경제본부 청년정책과	행정부시장 보좌기구 청년정책관	도지사 보좌기구 청년정책추진단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공간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센터(오랑) • 청년활동지원센터 • 청년허브 • 무중력지대 • 청년교류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센터마루 • 청년복합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센터(청년다락) • 청년회관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센터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보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센터 홈페이지 	
정책 조정 위원회	인적 구성	위원수	20명 이내 (위원장 2, 부위원장 1)	20명 이내 (위원장 1, 부위원장 1)	25명 이내 (위원장 2, 부위원장 1)	20명 이내 (위원장 2, 부위원장 1)	30명 이내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 위촉위원 중 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 위촉위원 중 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 • 위촉위원 중 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 • 위촉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위원 중 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중 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중 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중 호선
	정기회의 운영	연 2회	연 1회	연 3회 이상	연 1회	연 2회	
네트 워크	네트워크 명칭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네트워크	청년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원탁회의	
	위원수	500명 이하	1,000명	50명 이내	250명 내외	100명 내외	
	위원장	남·녀 1명씩 선출	(대외적 확인 불가)	1명 호선	(대외적 확인 불가)	(대외적 확인 불가)	
	부위원장	(대외적 확인 불가)	(대외적 확인 불가)	남·녀 1명씩 호선	(대외적 확인 불가)	(대외적 확인 불가)	
	위원 임기	1년	2년	1년	1년	1년	
	분과수	6개	5개	4개	16개	8개	
위원수/분과수	83.3명	200명	12.5명	15.6명	12.5명		

주: 2022년 7월 조사 기준임.

4. 인천시 청년 참여 현황분석

- 청년의 참여 현황 및 참여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분석, 면접조사, 행정자료 분석 등을 실시함.
 - 인천시 청년의 참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통계 분석함.
 -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함.
 - 인천시 청년 참여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천시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면접조사를 통해 참여제도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며 운영상의 개선점을 확인함.
 - 인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함.
- 청년들의 참여 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조사 실태 자료(2018~2021년, 4년치)를 활용함. 참여행태는 정치참여, 사회참여, 정책참여로 구분하여 분석함.
 - 인천시 청년의 참여 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특·광역시 청년 및 인천시 타 연령대와 비교함. 실태조사에 인천시 청년은 167~213명이, 인천시민은 504~522명이 참여함.
- 인천시 청년은 정치참여의 측면에서 선거 및 정당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정치·사회 현안에 서명이나 의견제시, 시위참여 등의 방식으로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정치 및 사회현안 참여로 측정한 인천시 청년의 정치참여는 타 지역([표 4-12])과 타 연령대([표 4-13])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분석됨.
 - 정치 및 사회 현안에 대한 참여는 특·광역시 중 2.5위, 인천시 타 연령과의 비교는 2위와 1.8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선거참여 및 정당활동으로 측정한 인천시 청년의 정치참여는 타 지역([표 4-8])과 타 연령대([표 4-9])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시 청년의 선거 참여는 7개의 특·광역시 중 평균 5.3위(6.08~7.08점), 5개의 연령 구간 중 19~29세는 평균 5위(4.73~6.07점), 30~39세 평균 3.8위(7.30~8.39점)로 선거참여를 통한 정치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 인천시 청년의 정당참여를 통해 측정한 정치참여는 특·광역시 청년과 비교하여 2018~2021년 평균 4위로 중간 정도이며, 인천지역 타 연령과 비교하면 19~29세는 4위, 30~39세는 3.8위로 타 연령대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인천시 청년의 사회참여는 특·광역시와 비교하면 평균 수준(2018~2021년 평균 3.8위)이었으며,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참여도는 19~29세가 4.3위로 낮은 편이고, 30~39세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분석됨.
 - 실태조사에서 시민사회조직의 참여 및 활동에 관한 항목 등으로 측정함.
 - 인천시 청년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민사회조직은 동창회·향우회이며, 동호회와 종교단체에 대한 참여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4-16〕).
 - 특·광역시 청년과 비교하면 직장조합, 종교단체, 시민단체, 주민조직, 사회적경제조직에 참여하는 청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인천지역 타 연령대와 비교하면, 30~39세는 2018~2020년에 직장조합, 2018년, 2020~2021년 동호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연도별 인천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인천시 청년의 정책참여는 특·광역시 청년(0.03~0.24점)과 비교하면 활발한 편이나 (0.00~0.41점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면(19~29세는 0.00점~0.37점, 30~39세는 0.00점~0.45점) 인천시 평균(0.08~0.48)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실태조사에서 공청회나 청문회 참여, 주민참여예산 활동 정도 등의 항목을 활용함.
 - 특·광역시 청년과 비교하면 3위 정도로 참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9세의 정책참여는 4.5위, 20~39세는 3.5위로 조사됨.
- 인천시 청년의 정책참여 현황은 인천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와 청년정책 관련 제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네트워크)의 참여 현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음.
 - 인천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연령별 참여 정도를 분석함. 위원회 참여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나 대표성이 가장 고려되지만, 19~39세 청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6.67% 정도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 비율이 적은 편임.
 - 특히 19~29세 청년은 0.7% 정도로 매우 적은 비율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인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회와 네트워크 등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제도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논의 구조나 문화, 시간 등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논의 시간이나 빈도 등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논의 결과에 대한 환류과정이 필요해 보임.
- 원활한 위원회 및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명확한 지침과 교육 등이 설계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청년네트워크의 참여 규모가 커진 만큼 논의 구조나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여 인천시와 청년 간의 충실한 논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의 소통 및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청년공간은 지역별로 조성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5. 인천시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

1) 청년 참여제도

- 인천시는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논의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의 기능은 다소 상이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청년 간의 소통·교류·논의를 위한 기구라는 점은 동일함.
- 지방자치단체와 청년 간의 소통·교류·논의를 위해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형식적이고 상징적이기보다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사업을 조정·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함.
 -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삶의 질 제고와 청년문제의 발견, 관련정책의 설계 등을 위한 청년들의 소통·교류 조직체임.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청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청년참여제도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된 청년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당사자인 인천시 청년, 청년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임.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임. 따라서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나 그 해결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 청년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먼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개최빈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실의 문제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결정 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2회 이상은 개최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와 제주도는 연 2회 이상, 광주시는 연 3회 이상 위원회 개최를 조례로 정하고 있음. 위원회를 2회 이상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되거나 위원장의 개최 필요성 제기, 위원의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해야 함(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 면접조사 결과,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위원들은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개최빈도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함.
 -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 중인 위원들도 분기별 1회 이상의 위원회 운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김정욱·안지선, 2021).
- 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과 공무원, 전문가 간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원활한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 시 개최시간이 2시간 정도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위원회를 통한 청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의 정책반영 노력을 환류(Feedback)하는 차원에서 위원회에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정책이 반영되진 않았지만 정책반영을 위해 어떠한 과정과 노력이 있었는지 등이 위원회에 공유된다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지역과 시민에 대한 책임과 보람에 기반하여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2) 청년네트워크

- 청년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소통·논의하는 조직임. 취업이나 창업, 참여, 주거, 문화 등으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 인천시는 2022년부터 청년들의 참여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수를 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함. 2022년 6월 현재 500여 명의 청년들이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음.
 -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함으로써 소수 청년들의 과대대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이나 쟁점들이 교류하고 논의될 수 있는 장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음.
- 청년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조직이나 예산 등이 확대된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음.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증가한 만큼 직영이나 민간위탁 등의 운영방식과 상관없이 청년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팀을 구성하거나 담당자를 충원할 필요가 있음.
 - 청년네트워크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청년네트워크에서의 논의과정을 충실히 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정책을 설계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체제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청년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예산의 확대 없이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청년네트워크와 인천시청 담당부서 간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 2022년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네트워크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정책의 기획을 위한 논의 구조는 좀 더 복잡한 형태가 되었음.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담당자 1명이 청년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어 청년정책 논의나 교류 등을 위한 거버넌스를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임.
 - 청년네트워크의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3단계의 거버넌스 구조(담당부서-창조경제혁신센터-청년네트워크)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은 상쇄될 수도 있을 것임.

- 청년네트워크를 헌신도, 관심, 역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정책을 구상하는 역할과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로 구분하여 운영하거나, 정책을 구상하는 역할과 제안된 정책에 공론을 제시하는 역할로 구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청년네트워크는 지역청년들이 경험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수립하는 등 충분한 관심이나 헌신, 시간의 투자 등이 필요한 참여제도임. 관심이나 헌신도, 참여역량 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위원들을 선발하거나 역할을 구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1안) 청년정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300~800명 규모의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함. 제시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100~200명의 청년들은 청년네트워크 분과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기획함.
 - 경상남도에서는 950명의 온라인 청년패널이 정책을 제안하고, 250명이 분과활동을 통해 논의 및 숙의과정을 가짐. 온라인 패널과 분과를 통해 제안된 정책을 정책자문단의 심사를 통해 정책을 제안함.
 - 2안) 관심과 헌신, 역량 등을 갖춘 100~200명의 청년들은 문제점이나 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청년네트워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함. 300~800명의 청년들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공론조사 방식의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함.

2) 위원회

-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다양성이나 민주성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음. 19~39세의 청년비율은 6.67%로 타 연령대와 비교하면 참여 정도가 낮음(김정욱·안지선, 2021).
 - 다만,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쟁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청년들의 위원회 참여 비율을 조건 없이 높이는 것은 지양해야 함. 청년들의 의견이 과대대표될 수 있기 때문임.

-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청년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인천시 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은 고민이 필요함. 일반위원회와 청년위원회 등에 이중참여가 될 수 있고, 과대대표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위원회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김정욱·안지선, 2021)인 만큼 전문성을 고려하며 위원회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 집단의 참여비율 확대는 지양해야 함.

3) 공간

- 공동이용공간은 지역주민 간의 교류와 소통을 발생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Kim, Jang, & Dicke, 2017)인 만큼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임.
- 인천시는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 참여 증진을 위해 청년센터마루를 운영하고 있음.
 - 2022년 현재 행정구역상 미추홀구, 부평구, 동구에 청년공간이 조성·운영되고 있음.
- 인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거주 및 활동 지역에 상관없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년들은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나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군·구별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설치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 등을 야간이나 주말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현재 조성된 인천시 청년공간은 시설별로 주중 저녁이나 토요일 등에도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좀 더 확대할 확의 여지가 있어 보임.
 - 권역별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조성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확인하여 청년공간을 조성하는 것, 기 조성된 공간은 공간 활용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 접근성과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빈집을 활용한 청년공간을 조성하는 것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청년공간의 조성뿐만 아니라 공간 이용도의 제고와 청년의 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공간에서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조성되는 공간인 만큼 청년들이 이용할 만한 동기요인이 있어야 할 것임.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으로 청년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청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간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4) 기타

-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청년공간의 이용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해 보임.
 - 시설 방문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공간 및 프로그램 접수뿐만 아니라 앱(Application) 또는 소셜미디어(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공간예약과 프로그램 접수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의 홍보나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네트워크)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거리나 시설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도 필요해 보임.

1 연구개요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2 참여에 대한 이해

- 1. 참여의 정의와 필요성 7
- 2. 참여의 유형 9
- 3. 참여와 사회적 자본 12
- 4. 청년 참여 부문 제도 14

3 청년 참여제도 사례조사

- 1. 사례조사 개요 27
- 2. 서울특별시 30
- 3. 광주광역시 42
- 4. 경상남도 50
- 5. 제주특별자치도 59
- 6. 소결 70

4 인천시 청년 참여 현황분석

- 1. 분석 개요 75
- 2. 청년의 참여 현황분석 79
- 3. 소결 101

5 인천시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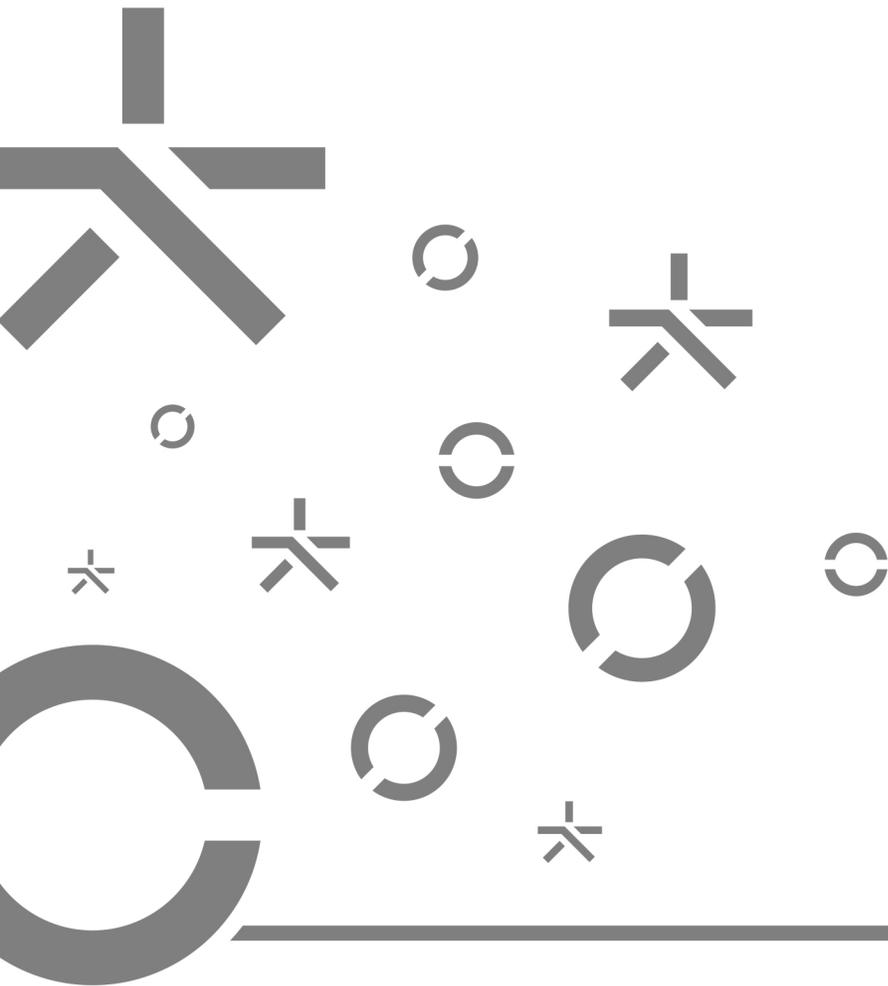
- 1. 청년 참여 활성화 및 개선 방안 107
- 2. 연구의 한계 113

- 참고문헌 115

[표 2-1] 참여의 유형: 정치, 사회, 정책참여	11
[표 2-2] 청년센터마루 기본 현황	23
[표 3-1] 광역자치단체별 청년 관련 조례 비교	29
[표 3-2]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주요 내용	30
[표 3-3] 광주시 청년기본조례 주요 내용	42
[표 3-4] 경상남도 청년기본조례 주요 내용	50
[표 3-5] 제주도 청년기본조례 주요 내용	59
[표 3-6] 청년 참여제도 사례 종합	72
[표 4-1] 사회통합실태조사 개요	76
[표 4-2] 조사 내용	77
[표 4-3] 면접조사 개요	78
[표 4-4] 응답자 현황: 특·광역시 청년	80
[표 4-5] 응답자 현황: 인천시민	81
[표 4-6] 특·광역시 청년의 지역소속감	82
[표 4-7] 인천시 연령별 지역소속감	83
[표 4-8] 특·광역시 청년의 정치참여: 선거	84
[표 4-9] 인천시 연령별 정치참여: 선거	85
[표 4-10] 특·광역시 청년의 정치참여: 정당 활동 정도	86
[표 4-11] 인천시 연령별 정치참여: 정당 활동 정도	87
[표 4-12] 특·광역시 청년들의 정치참여: 일반	89
[표 4-13] 인천시 연령별 정치참여: 일반	90
[표 4-14] 특·광역시 청년들의 사회참여	91
[표 4-15] 인천시 연령별 사회참여	92
[표 4-16] 특·광역시 청년들의 사회참여: 시민사회조직 참여	92
[표 4-17] 인천시 연령별 사회참여: 시민사회조직 참여	95
[표 4-18] 특·광역시 청년들의 정책참여	97
[표 4-19] 인천시 연령별 정책참여	98
[표 4-20] 인천시 위원회 연령별 참여현황	99

[그림 2-1] 인천청년포털 모습	24
[그림 3-1] 광역자치단체별 「청년 기본 조례」 제정 현황	27
[그림 3-2] 서울청년포털 모습	41
[그림 3-3] 광주청년센터 홈페이지 모습	49
[그림 3-4]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모습	58
[그림 3-5]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 모습	69

연구개요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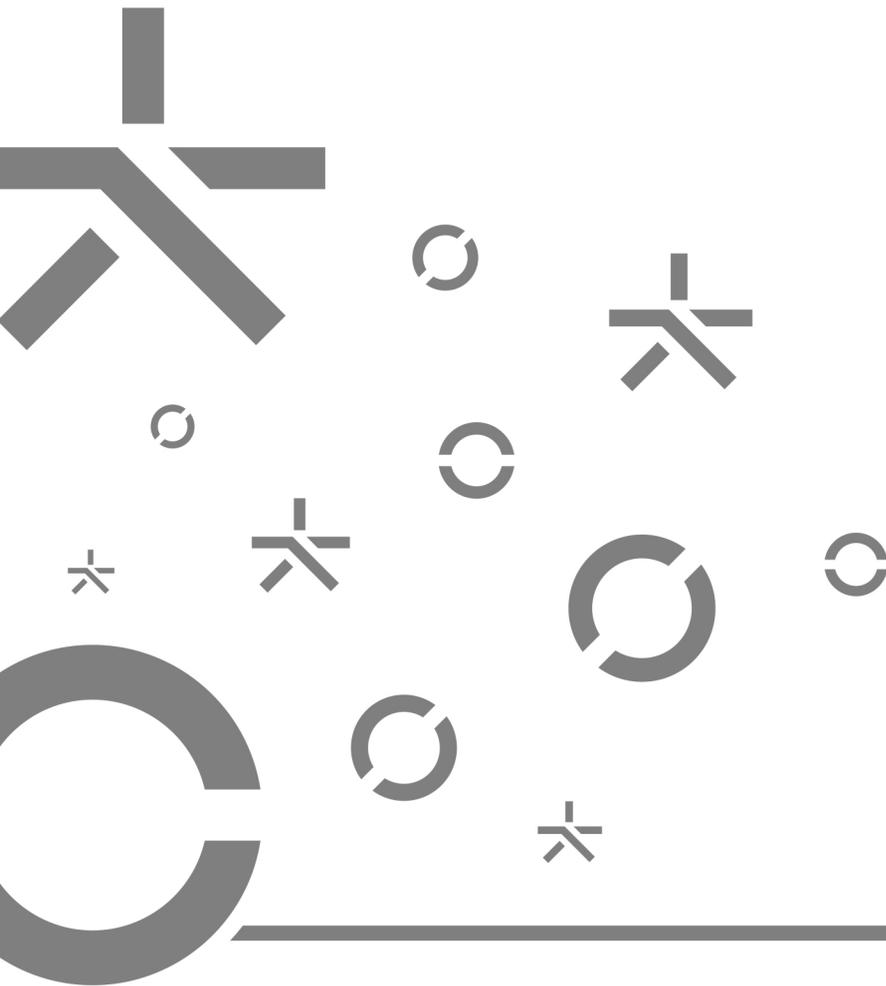
- 청년들은 일자리, 주거,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정부 정책은 유아와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기획 및 집행되고 있음. 청년들이 직면하는 문제나 요구는 적절하게 대응되고 있지 않았음.
-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청년들의 문제나 요구 등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응하기 시작함.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은 주택, 문화, 일자리, 참여 등으로 기획됨.
 -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방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네 개의 분야를 기초로 정책을 기획 및 집행하고 있음.
- 인천시는 2018년 청년들의 주택, 문화, 일자리, 참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함.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2020년~2024년) 인천형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
 - 청년들의 지역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는 청년들의 지역참여와 청년들이 당면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 교류, 참여, 및 협력의 창구로 기능함.
 - 인천지역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및 지원하기 위해 청년공간인 청년센터마루를 설치·운영함.
- 인천지역 청년들의 참여와 관련된 정책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인천지역의 청년들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청년들의 지역참여를 위해 설계된 제도는 어떠한 점이 보완될 필요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인천시 청년들의 참여 정도를 분석하고, 참여제도 운영상의 개선 및 보완점을 분석하여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인천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참여를 어느 정도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분석하고,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 등의 제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함.
 - 인천시 청년들의 지역참여 및 참여제도 현황을 조사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시 청년정책의 참여 분야의 정책 방안을 제시함.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본 연구는 인천시 청년정책의 참여 분야와 관련된 개념, 이론, 제도의 현황과 운영사항, 참여 현황 등을 분석함.
 - 내용적 범위로는 인천시 청년정책 참여와 관련된 개념과 이론, 청년정책 참여 분야 제도 및 타 시·도 사례, 청년의 참여 현황 분석 등임.
 - 공간적 범위로는 인천시를 중심으로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함.
 - 시간적 범위는 인천시가 청년정책을 시작한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를 중심으로 진행함.
 - 청년들의 참여 관련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18년~2021년(4년) 자료를 활용함.
- 본 연구는 청년정책 참여 분야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인천시 청년들의 지역참여 정도와 참여 분야 정책의 개선점을 모색해 보고자 함.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서 문헌검토, 면접조사, 통계분석 등을 실시함.
 - 청년정책 참여 분야와 관련된 개념 및 이론을 검토하고, 인천시와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중 참여 분야와 관련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검토함.
 - 인천시 청년정책 참여제도의 개선할 점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 인천시 청년의 지역참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함.

참여에 대한 이해



참여에 대한 이해

1. 참여의 정의와 필요성

(1) 참여의 정의

- 현실에서 참여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짐.
 -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의 행사·활동, 학교나 종교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의 행사 및 자원봉사 활동이나 기부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함(주성수, 2004).
 -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빈곤퇴치운동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 시위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함(Denhardt, 2011).
 - 4~5년에 한 번 정도 시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행위를 통해 참여하기도 하며, 온라인을 통해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탄원서나 진정서 등에 서명함으로써 참여하기도 함(주성수, 2004; 하상근, 2018).
 -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형태로도 나타나며,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참여로 보기도 함(이승종·김혜정, 2018).
- 학문적으로 참여는 시민참여라는 용어로 사용됨¹⁾. 시민참여는 시민과 참여가 결합한 용어로서, 참여의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됨.
 - 시민은 지역이나 사회에 영향을 주는 쟁점 또는 문제에 관심과 책임을 갖는 사람들을 의미함(Denhardt, 2011).
 - 참여는 공동 또는 공공의 문제와 쟁점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재정을 조달 또는 기부하는 것, 내지는 행동으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함(주성수, 2004).

1) 영어로는 Citizen Participation, Civic Engagement, Public Participation, Citizen Involvement 등으로 표현됨(주성수, 2004).

- 시민참여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이나 정부의 정책과정, 사회문제나 관심사 등에 참여하는 행위로 정의됨.
 - Barnes & Kaase(1979)는 시민참여를 정치 또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 정치적인 선택과정에서 영향력을 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이승중·김혜정, 2018, 54쪽에서 재인용).
 -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참여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이 논의됨.
 - Yang & Pandey(2011)는 시민참여를 정부의 의사결정이나 관리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한정하여 정의함. 시민참여를 투표행위로 대변되는 정치참여나 자원봉사 등과 구분하여 설명함.
 - 김태영(2014)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시민참여로 정의함. 시민참여는 투표, 시위 참여, 공청회나 위원회 참여, 정책집행을 위한 수탁과정에 참여, 모니터링과 로비, 청원과 진정, 민원 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함.
 - 하상근(2018)은 시민참여를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사회 현상이나 쟁점 등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함. 시민사회의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는 활동의 정치참여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나 자원봉사 등의 사회참여로 구분함.
 - 주성수(2004)는 시민참여를 목적이나 대상 등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설명함.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나 쟁점, 정책 등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행정이나 정책 과정에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시민참여로 설명함.
 - 이승중·김혜정(2018)은 선행연구를 통해 시민참여의 개념에 포함되는 요소로서 ① 일반시민이 주체가 되어, ② 참여의 행위로 나타나며, ③ 공공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④ 정부영역이 주요 대상이지만 ⑤ 사회영역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함.
 - 선행연구나 관련 문헌에서 말하는 시민참여는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공동의 문제나 공공의 영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기도 함. 가장 포괄적인 개념은 정치나 정책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공동의 관심이나 문제 등을 위해 의사소통이나 상호교류 등의 사회활동 분야나 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함.

- 본 연구는 정치과정이나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이나 사회의 문제 또는 쟁점에 대한 의견제시, 소통 및 행동 등으로 참여하는 형태 등을 시민참여의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함.
 - 본 연구는 청년의 참여제도를 조사하고,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인 만큼 청년정책의 참여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참여를 정의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참여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위원회 및 네트워크),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도모하는 사업(네트워크 및 공동공간)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2) 참여의 필요성

- 대의민주주의는 선출된 정치엘리트에 의해 공공의 문제나 쟁점이 다루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채종현 외, 2019). 대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정이나 정책과정을 정치엘리트나 공무원이 담당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배제될 수 있는 구조임.
 - 시민참여는 정부의 행정이나 정책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사람이나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거나, 행정작용이나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함(Thomas, 2013).

2. 참여의 유형

- 참여는 영역에 따라 정치참여, 시민참여, 정책참여로 유형화할 수 있음(주성수, 2004).
- 정치참여는 정치적 특성을 갖는 영역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 정치참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중앙이나 지방의 행정부나 입법부의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인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임.
 - 투표 외에도 정당 활동이나 후원, 정치 캠페인, 시위나 집회의 참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을 통해 정치적인 견해를 제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청원서에 서명하는 행위 등을 포함함.

- 사회참여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함. 정치참여와 사회참여는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으나 활동이나 행동이 정치적인 성격 또는 목표 등과 관련 있을 때 정치참여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회참여로 구분함.
 - 사회참여는 정치적인 목적을 조직의 주요 목표로 추구하지 않는 사회조직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나 기부하는 행위 등을 의미함.
 - 예를 들어 가족이나 이웃, 직장동료 등 공식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은 집단과 교류하는 행위부터 주민조직, 비영리조직, 직장 내 조직(노동조합이나 동호회 등) 상대적으로 공식적인 형태를 갖는 시민사회의 조직에 기부나 자원봉사, 회원 등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포함함.
 - 최근에는 온라인 카페나 웹사이트 등 인터넷 공동체에서 (정치적인 목적이나 성격을 제외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행위도 사회참여의 유형으로 구분함.
 - 정치참여와 시민참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음. 시민단체 활동이 정치적인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되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결정과 상관없이 단체의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일 수 있음.
- 정책참여는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를 뜻함.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행정과정에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 예를 들어, 주민발안(Initiative)이나 주민투표(Referendum), 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시민배심원, 주민소환(Recall) 등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 또는 수렴하거나 결정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설계한 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함.
 - 정책참여 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수 있음(Bingham, Nabatchi, & O'Leary, 2005).
 - 첫째, 정책참여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은 자신들의 선호를 명확히 알게 될 수 있음.
 - 둘째, 정책참여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특정 정책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여 전체 시민들을 대표하여 정책선호를 제안할 수 있음.

- 셋째, 실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함으로써 정책의 대안이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정책참여의 정도는 정보제공, 절차적 참여, 협의와 집합적 문제해결, 합의 형성 등의 네 단계로 분류해 볼 수 있음(Creighton, 2005; 이승종·김혜정, 2018, 109~110 쪽에서 재인용).
 - 정보제공: 시민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을 말함. 참여를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참여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임.
 - 절차적 참여: 정부의 행정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법적 절차나 제도를 의미함. 정보의 공유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공동문제해결의 수준은 아님. 공청회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임.
 - 협의·집합적 문제해결: 정부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시민으로부터의 지지나 합의를 위한 방식임. 정부와 시민이 합의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를 말하지만, 모든 사안에서 항상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짐.
 - 합의 형성: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나 이해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말함.

[표 2-1] 참여의 유형: 정치, 사회, 정책참여

구분	내용
정치참여	투표, 정당활동 및 후원, 서명, 시위·집회, 청원 등에 참여
사회참여	기부, 자원봉사, 회원 활동, 파업 등에 참여
정책참여	주민발안, 주민투표, 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시민배심원, 주민소환 등에 참여

주: 주성수(2004). 74쪽 '개인-집단주의와 정치, 사회, 정책참여 매트릭스' 참고하여 저자가 재작성

3. 참여와 사회적 자본

- 시민들이 공동의 쟁점이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회적 자본 이론이 있음.
 - 사회적 자본은 관계 속에 들어 있는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을 통해 공동의 목적이나 관심을 위해 조정이나 협력 등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관계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임(Putnam, 1995).
 - Putnam(1993)은 사회관계에서의 잦은 교류는 호혜성의 규범과 신뢰를 구축하게 하고, 관계망을 통해 정보공유가 가능해지거나 수월해진다고 주장함. 사람들은 잦은 교류를 통해 상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발견하게 되어 공동의 목적을 위한 집합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또한, 잦은 교류를 통해 참여의 규범이나 공동체 의식 등을 형성하여 공동의 문제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함.
 -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개인의 관계 구조가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함. 관계에서 공유되는 정보나 형성된 규범은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독려하거나 혹은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함.
 - 사회적 자본은 시민이 사회의 문제나 쟁점 등에 관심을 갖게 하거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주요한 요인임.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을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있음(송경재, 2020; 하상근, 2018; Kim & Jang, 2017; Musso & Weare, 2017; Putnam, 1995).
 - Kim & Jang(2017)은 Putnam의 사회적 자본 이론관점에서 공동체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등을 통한 지역주민 간의 교류가 사회적 자본을 발생시켜 지역참여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함. 지역주민 간의 반복적인 교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게 하고, 정보교류나 관심사 공유를 통해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나 쟁점에 참여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함.
 - Kim, Jang, & Dicke(2017)는 잦은 교류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지역참여로 이어진다고 주장함. 공동체시설이나 주민공동체 등에서의 교류를 참여를 유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언급함. 공동체시설이나 주민공동체는 참여주민 간에 소통을 발생시키고,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주민조직에 공동의 의견을 전달하게 한다고 설명함.

- Musso & Weare(2017)는 다양한 관계망은 시민들의 지역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함. 특히, 강하고 친밀한 관계에서는 참여에 대한 규범이나 문화 등과 같은 압력이나 공동체의식 등을 통해 참여가 촉진된다고 설명함.
 - 하상근(2018)은 상호신뢰와 관계를 통한 정보의 공유, 규칙의 준수와 호혜성 등이 사회 및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있음. 유대관계가 사회 및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규칙 준수가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함.
 - 송경재(2020)은 사회참여와 정치참여에 사회적 자본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측정함.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인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 호혜성의 규범, 네트워크가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고, 공적신뢰, 네트워크가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함.
- 참여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함.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음.
- 상호교류를 하는 사람이나 참여하게 될 기관(예를 들어 정부기관)에 대한 믿음이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임. 예를 들어, 집합행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집합행동을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정부기관에서 설계한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소통이 되거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신뢰가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참여에 대한 규범의 영향에 대한 설명은 공동체 의식이나 호혜성의 규범, 참여의 문화 등으로 설명됨. 즉, 반복적인 교류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규범이나, 참여의 규범과 같은 특정 문화를 형성하게 하여 공동의 문제가 관심사항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짐.
 -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에 대한 설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설명이 됨. 관계망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가 공유되어 집합행동이 가능해지거나 특정 정보가 공유되어 참여의 계기로 작동될 수 있음.

4. 청년 참여 부문 제도

1) 제도

(1) 조례

-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의 참여 확대와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함.
 - 해당 조례는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시행은 2020년 8월부터 함)에 앞서 2018년 2월 제정됨. 그러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늦게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함.
 - 서울시가 2015년 1월로 가장 먼저 청년조례를 제정하였고, 인천시가 2018년 2월로 가장 늦음²⁾.
-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조례 제1조).
 - 청년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조례 제3조 제1호).
 - 조례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행정기관과 청년의 소통과 교류, 청년의 참여와 청년 간의 소통 등을 위해 네트워크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³⁾.

(2) 기본계획

-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조례 제6조).
- 인천시는 2020년 9월 「인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함.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청년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전략별 실천과제들을 제시함(인천광역시, 2020).

2) 조례의 제정일 순으로 나열해 보면 2015년에는 5곳(서울, 전남, 경기, 광주, 대구), 2016년에는 6곳(충남, 충북, 경남, 제주, 대전, 세종), 2017년에는 5곳(전북, 울산, 부산, 강원, 경북), 그리고 2018년에는 1곳(인천) 순임(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3) 인천시 조례 제10조에서 “시장은 인천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원·육성 방안을 모색해야 함”,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에서 “시장은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와 청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비전은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청년 행복 1위 도시, 인천’으로 설정함.
 - 목표는 세 가지로 제시함. ①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청년고용률 1위 달성, ② 청년이 주체가 되는 활동공간 확충, ③ 청년의 역량강화와 활동지원 확대임.
 - 추진전략은 ① 사회진출 지원 및 취업촉진, ② 창업지원 및 역량강화, ③ 청년 네트워크 참여 확대, ④ 사회서비스 제공 및 생활지원 등임.
- 중앙정부 정책과 조율의 필요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1년 12월 「인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25년)」을 발표함(인천광역시, 2021).
- 정부는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공표하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청년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함(관계 부처 합동, 2020).
 - 비전은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로 설정함.
 - 원칙은 ① 참여와 주도, ② 격차 해소, ③ 지속가능성 등 세 가지로 수립함.
 - 정책방향은 ① (일자리 분야)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② (주거 분야)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 ③ (교육 분야)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 ④ (복지·문화 분야) 청년의 생활이 개선, ⑤ (참여·권리 분야)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 등 다섯 가지로 제시함.
 - 인천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정하며 비전은 기존 문구에서 ‘도전’을 제외한 “청년을 응원하는 청년 행복 1위 도시, 인천”으로 변경함.
 - 목표는 네 가지로, ① 청년 일자리 창출, ② 청년 주거 지원, ③ 청년 문화·여가 지원, ④ 청년시설·공간 구축 등임.
 - 기존 목표도 세부 내용상으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활동공간 등을 포괄함.
 - 추진전략은 ① (취·창업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② (주거·생활 지원) 지역사회 정착, ③ (문화·참여 지원) 일과 휴식의 균형, ④ (4차 산업 인력 양성) 청년인프라 구축 등으로 발표함.
- 수정된 기본계획에서 청년의 참여와 소통 관련 정책의 추진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청년조직의 확대’와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정비’임.

- 청년의 참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을 의무화하며, 청년네트워크를 양적으로 확대 구성할 계획을 제시함.
 - 조례는 기존의 두 가지(「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에 세 가지(일자리 지원, 주거 지원, 참여 활성화) 조례를 추가하여 정책 분야별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힘.
 - 위원회는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10%로 의무화하는 방침 등을 통해 청년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수를 확대하기로 함.
 - 또한, 인천시와 군·구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민·관 협의를 통해 평가, 조정, 심의하기로 함.
 - 청년네트워크는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도모하여 청년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청년조직임. 2022년부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의 규모를 1천 명으로 설정함.
- 청년들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확대·구축함. 온라인 청년포털을 정비하고, 청년의 휴식과 활동 및 취·창업 지원 공간을 권역별로 조성하며, 청년정책의 중심점이 될 청년센터를 설립하기로 함.
 - 청년포털은 청년 관련 공공정보와 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시하기 위한 온라인 전달체계로서, 이용자 중심의 실시간 정보 참고 형태로 구축하기로 함.
 - 청년공간은 응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 한 곳씩 마련하여 청년의 소통과 교류, 취·창업 역량 강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함.
 - 청년센터는 동구 송현동에 1개소를 설립하여 청년정책의 연구와 실행을 돕고, 청년활동 지원 사업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부여하기로 함.

(3) 시행계획

- 인천시는 5년 단위인 「인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인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음(조례 제7조)⁴⁾.
- 2021년 시행계획에서 청년의 참여와 권리 분야 추진과제는 총 3건임(전체 45건).
 - 예산 규모는 약 21.9억 원으로 전체 청년정책 예산(약 774억원)의 2.83% 수준임(인천광역시, 2021)⁵⁾.
 - 2021년 시행계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일자리 분야임. 추진과제의 수는 27건이며, 예산 규모는 약 345.6억 원으로 전체 청년정책 예산의 44.6%임.
 - 추진과제 1: 청년네트워크 2기의 2년차 활동을 전개하고, 3기를 선정하는 것임.
 - 네트워크 2기는 청년위원 50명으로 구성됨.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함. 전체회의 2회, 중간보고회 및 워크숍, 최종보고회 등을 계획함.
 - 추진과제 2: 청년공간 1·2호점 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호점을 개소하는 것임.
 - 대관업무 이외에도 토크(talk-talk) 멘토링, 청년마음터, 유유마당, 청년모임지원(IN-JOY)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함.
 - 추진과제 3: 청년공간 추가 구축을 위한 정부 이전 재원의 확보와 대상지역의 선정임.
 -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신청하고, 예산 확보 시에는 청년공간 4호점 지역을 선정하는 등 공간 구축 작업에 착수하는 것을 계획함.
- 2022년 시행계획에서 청년의 참여와 권리 분야 추진과제는 총 7건임(전체 80건).
 - 예산 규모는 약 24.4억 원으로 전체 청년정책 예산(약 891억 원)의 2.73% 수준임(인천광역시, 2022)⁶⁾.

4)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현년도 시행계획을 청년정책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조례 제7조 제2항).

5) 2021년 시행계획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일자리 분야임. 추진과제의 수는 27건(전체 45건)이며, 예산 규모는 약 345.6억 원으로 전체 청년정책 예산의 44.6%임. 일자리 분야 다음은 주거 29.5%(228.6억 원), 교육 17.4%(135억 원), 복지·문화 5.6%(43억 원), 참여·권리 2.8%(21.9억 원) 순임.

6) 2022년 시행계획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일자리 분야임. 추진과제의 수는 27건(전체 80건)이며, 예산 규모는 약 265억 원으로 전체 청년정책 예산의 29.7%임. 일자리 분야 다음은 주거 24.3%(216.6억 원), 복지·문화 24%(213.8억 원), 교육 19.2%(171.6억 원), 참여·권리 2.7%(24.4억 원) 순임.

2021년에는 다른 분야보다도 일자리 분야에 월등히 많은 예산이 배정됨(전체 청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차순위보다 15%p 더 많았음). 2022년에도 일자리 분야 예산 비중이 높은 편이나, 다른 분야(특히 교육과 복지·문화

- 추진과제 1: 인천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것임.
 -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촉직 위원 10%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계획함. 2022년에는 청년참여 위원회로 30개를 선정하여 위촉 현황과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함.
- 추진과제 2: 청년 관련 조례 3건(일자리 지원, 주거 지원, 참여 활성화 지원)을 제정하는 것임.
- 추진과제 3: 청년네트워크 3기를 확대 선정하고 1년 차 활동을 전개하는 것임.
 - 청년네트워크 3기는 청년위원 1,000명으로 구성하여 전년도 50명보다 크게 확대함. 2022년 1월과 2월에 1·2차 위원을 선정함. 임기는 위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으로 함. 전체회의 2회, 중간보고회 및 워크숍, 최종보고회 등을 계획함.
- 추진과제 4: 청년공간 1·2·3호점을 운영하고 4호점과 5호점을 개소하는 것임.
 - 대관업무 외에도 취·창업 역량강화, 청년모임지원(IN-JOY)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함.
 - 청년공간 확대 건립 대상지를 검토하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신청 등도 계획함.
- 추진과제 5: 청년복합문화센터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는 것임.
 - 청년복합문화센터는 권역별 청년공간을 연결하고, 청년정책의 발굴과 연구 지원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립을 추진함.
 - 2022년에는 부지매입과 설계용역 발주, 공간구성 설계 협의 등을 계획함. 2023년에는 공사를 시작하고 위탁사업 기관 체결 등을 거쳐 2024년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추진과제 6: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청년정책 지원 사업 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임.
 - 청년층의 일자리 선호와 취업 사각지대 분석 등을 통한 직무 추천 모형 개발을 완료하고, 웹사이트 시각화와 안정화 작업을 계획함.
- 추진과제 7: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신규 청년포털을 구축하는 것임.
 - 기존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웹사이트를 '인천청년포털'로 개편하는 것을 계획함.

분야) 비중이 크게 늘어남. 주거 분야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33.2억원)이 신규 도입된 영향임. 복지·문화 분야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지원과 같은 국가직접지원 사업비(78.9억원), 그리고 청년 직장인들에게 퇴근 후 문화공연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추진한 사업비(31.8억원) 등이 예산 비중의 확대에 영향을 미침.

7) 2021년 5월 기준으로 인천시 전체 위원회 수는 247개임. 이 중 30개(약 12%) 위원회를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로 지정하는 것을 계획함. 2025년까지 전체 위원회의 30%를 청년참여 위원회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정책의 분야별 정보를 종합적·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포털을 구축하고, 인천시 홈페이지와도 연계하는 것을 계획함.
- 2022년 1월부터 디자인과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여 5월 9일부터 포털을 개시함(인천광역시, 2022.05.08).

2) 청년 참여 관련 기구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인천시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임.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 2018년 설립 당시에는 ‘청년정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위원회를 설치함. 정부가 2020년 「청년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규정한 것을 고려하여 인천시도 2021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함.
 - 주요 심의·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조례 제9조 제2항).
 -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조례 제9조 제3항).
 -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함.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함.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그 직무를 대행함(조례 제9조 제6항).
 - 당연직 위원은 경제·주택·복지·문화 등에 관한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함(조례 제9조 제4항).
 -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50% 이상은 청년으로 구성해야 함(조례 제9조 제5항)

- 인천시의회 의원, 청년단체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2022년 7월 기준으로 위원회 위원은 총 20명으로, 당연직 5명, 위촉직 15명임.
 - 위촉직 15명 중 8명이 청년정책 당사자인 청년위원임.
-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조례 제9조 제10항), 각종 사무의 처리를 위한 간사는 인천시 내에서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수행함(조례 제9조 제11항).
 - 2022년 7월 기준으로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일자리경제본부 청년정책과임⁸⁾.
-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의 50%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50% 이상이 찬성하여야 의결한 것으로 봄(조례 제9조 제9항).
 - 정기회의 이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위원회 위원에게는 2년간의 임기를 부여하며, 연임은 1회만 할 수 있음(조례 제9조 제7항).
 -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큼을 임기로 하며,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함.
 - 위원회 1기는 2019년 4월 위촉되어 2021년 3월까지(2년간) 활동함. 매년 1회씩 총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함.
 - 위원회 2기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2년간)를 임명 기간으로 함. 2022년 7월 기준으로 총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함(2021년 1회, 2022년 2회).
 - 중앙정부 정책과의 조율을 위해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정하게 됨. 이로 인해 1기보다 한 차례 더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으로 파악됨.

8)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조직도(www.incheon.go.kr/IC04022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8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9항 등을 참고함.

(2) 청년네트워크

- 청년네트워크는 인천시 정책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구로서,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를 근거로 하고 있음.
 -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도하에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점검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청년네트워크를 조직함.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청년정책 제안 및 현황 점검(monitoring),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 청년층 의견 수렴, 청년정책 관련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등
- 청년네트워크는 연간 1,000명의 위원을 구성·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21년 1월 발표한 「인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연간 50명씩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음(인천광역시, 2021).
 - 「인천 청년 기본계획」 발표(2020년 9월) 이전부터 구성된 제1기 청년네트워크는 30명 규모로 선정되어 2018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년간 활동을 수행함.
 - 제2기 청년네트워크는 50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 5개월간을 임기로 함.
 - 2021년 12월 「인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발표하며 2022년부터는 연간 1,000명씩 위원을 선정하기로 함(인천광역시, 2022).
 - 2022년 1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제3기 청년네트워크는 1·2차 위원 선정을 통해 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532명을 위촉함. 하반기 추가 모집을 통해 목표한 1,000명으로 구성을 완료할 계획임.
 - 청년네트워크 위원의 임기는 약 2년이며, 현재 5개 분과(취업, 창업, 문화·예술, 주거생활안정, 참여·권리)로 운영 중임.
 - 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532명의 위원이 5개 분과에 100명 내외로 분포해 있음: 취업(118명), 창업(98명), 문화예술(118명), 주거생활안정(116명), 참여권리(82명)

9)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 청년네트워크 소개 내용을 참고함(www.incheon.go.kr/youth/YO060102).

3) 공간

(1) 청년센터마루 (구. 유유기지)

- 청년센터마루는 청년들의 휴식과 교류, 사회활동 참여 유도, 취·창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공간임(인천광역시, 2022).
 -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와 제19조,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의2 등을 설치·운영의 근거로 하고 있음.
 - 2017년 10월 ‘유유기지’¹⁰⁾라는 제물포스마트타운에 청년공간 1호점을 개소함.
 - 2020년 2월과 2021년 12월에는 각각 부평구와 동구에 청년공간 2·3호점을 개소함.
 - 2021년 12월 27일부터는 청년공간 ‘유유기지’의 명칭을 ‘청년센터마루’로 변경함¹¹⁾.
 - 2022년에는 서구와 강화군, 2023년에는 중구와 연수구, 계양구, 2024년에는 남동구 지역에 청년공간 추가 개소를 계획 중임.
- 청년센터마루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공간 대여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됨¹²⁾.
 - 공간 대여 서비스는 각 시설의 용도와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고 있음.
 - 개인 독서나 공부를 위한 공간, 모임과 회의를 위한 공간(4~6명 내외), 세미나와 강연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30명 내외) 등을 대관하고 있음. 청년센터마루 3곳의 규모가 상이하여 제공하는 대관시설의 종류와 이용 시간 등에는 차이가 있음.
 -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관심사와 일상을 나누고, 진로 설정이나 취·창업 준비 등에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음.

10) 유유기지는 청년들이 무리지어 어울리며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무리지를 유(類)), 마음이 흐뭇해지는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하며(즐거울 유(愉)), 자신의 꿈을 위해 현재를 기록해 나갈 수 있는(기록할 기(記)), 열린 공간(터 지(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inuu.kr/bp/bbs/board.php?bo_table=bp_about_inuu01&me_code=5010)

11) 청년센터마루는 ‘청년의 비상을 지원하는 가장 으뜸이 되는 청년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명칭 변경을 위한 시민 공모를 진행하였고, 심사위원이 제안한 ‘청년센터마루’가 최종 결정됨. 청년센터마루 부평 홈페이지 ‘인천 청년공간 새 명칭 선정 결과 안내’ 게시글을 참고함.

(www.inuu.kr/bp/bbs/board.php?bo_table=bp_commu_inuu01&me_code=6010)

12) 각 청년센터마루 홈페이지 - 청년센터마루 인천(www.inuu.kr/index-j.php), 청년센터마루 부평(inuu.kr/bp/index-b.php), 청년센터마루 동구(uudong.kr) 홈페이지 등을 검토하여 정리함.

- 청년들의 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일자리·문화·예술 등 관심 분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관심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하거나 전문상담사로부터 조언받을 수 있는 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음.

[표 2-2] 청년센터마루 기본 현황

구분	청년센터마루 인천 (청년공간 1호점)	청년센터마루 부평 (청년공간 2호점)	청년센터마루 동구 (청년공간 3호점)
위치	미추홀구 석정로 229 (도화동) 제물포스마트타운 14~15층	부평구 부평대로 301 (청천동) 남광센트렉스 116호	동구 송림로 14 (금곡동) 동구청년21
개소일	2017년 10월 16일	2020년 2월 1일	2021년 12월 1일
시설규모	• 지상 2개층 • 연면적 1,416.4㎡	• 지상 1개층 • 연면적 415㎡	• 지하 1개층, 지상 5개층 • 연면적 838.89㎡
운영시간	• 월~금요일 10:00~22:00 • 토요일 10:00~17:00 • 일요일, 공휴일 휴관	• 월~금요일 10:00~21:00 • 토요일 10:00~18:00 • 일요일, 공휴일 휴관	• 화~토요일 10:00~22:00 • 일요일 10:00~17:00 • 월요일, 공휴일 휴관
운영기관	위탁 운영 (인천시 → 인천시출연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위탁 운영 (부평구 →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	직접 운영 (동구 주민자치과 인구청년정책팀)

주: 2022년 7월 1일 기준, 각 청년센터마루 홈페이지와 「인천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을 검토하여 작성

(2) 청년복합문화센터

- 청년복합문화센터는 권역별로 위치한 청년센터마루를 연결하는 구심점이자, 청년정책의 발굴과 연구, 청년활동 지원 등을 총괄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건립을 추진 중인 곳임(인천광역시, 2022).
 -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와 제19조를 설치·운영의 근거로 하고 있음.
 - 2021년 10월 설립 계획(안)을 수립할 시에는 '인천시 청년센터'로 명명하였으나, 2022년 1월 '청년복합문화센터'로 임시 명칭을 변경함¹³⁾.
- 동구 송현동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1,000㎡ 내외의 규모로 건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 제반 준비 후 2023년 착공하여 2024년 개소할 예정임.
 - 국토교통부의 거점연계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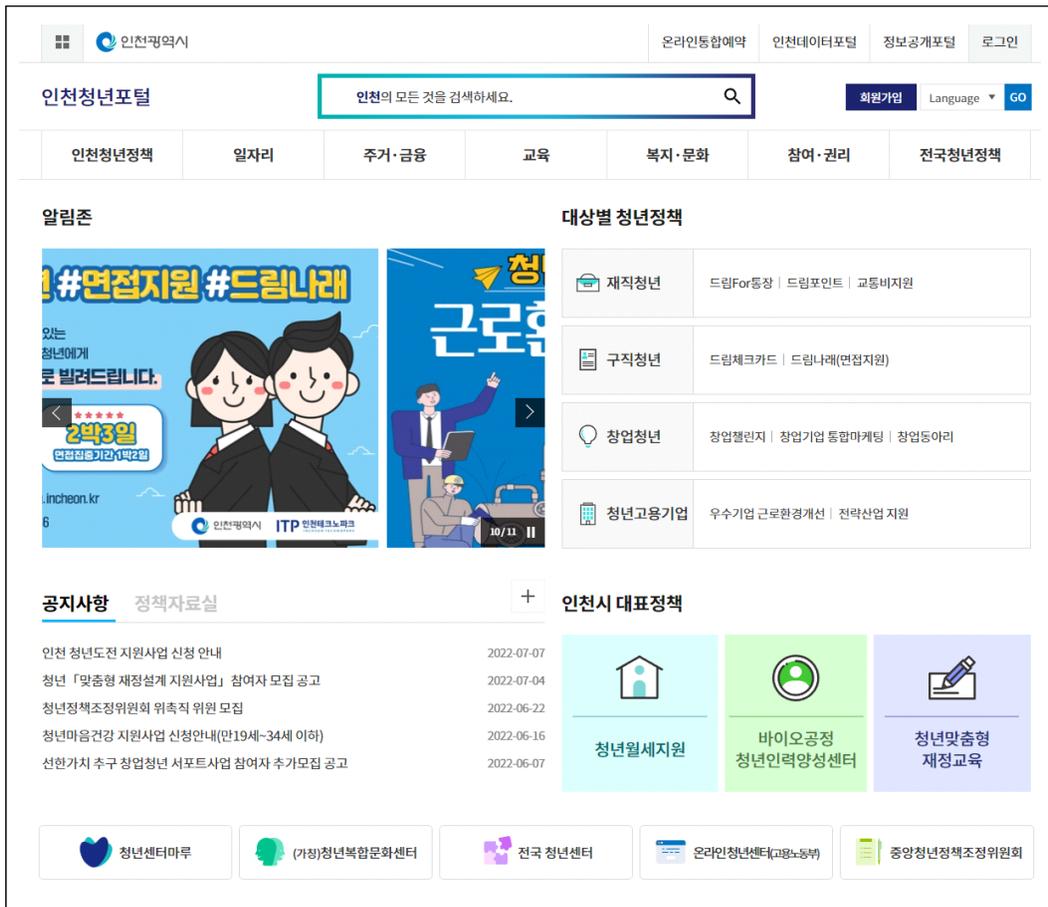
13) 추후 변경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청년복합문화센터'라는 명칭도 가칭으로 발표한 상태임(인천광역시, 2022).

-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동인천역 일대의 중심 시가지를 정비하여 20~30대 청년들이 다시금 원도심을 찾도록(역전하도록) 만들려는 사업임(인천도시공사·인천광역시, 2020.12.18.).

(3) 인천청년포털

- 인천시는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독려하고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공간으로서 인천청년포털(www.incheon.go.kr/youth)을 운영하고 있음.
 - 인천시 청년정책의 방향과 분야별·대상별 정책정보, 지원사업 등을 게시하고 있음.
 -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세부사업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도 총망라하여 비교·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2-1] 인천청년포털 모습



주: 2022년 7월 1일 기준, 인천청년포털(www.incheon.go.kr/youth)

청년 참여제도 사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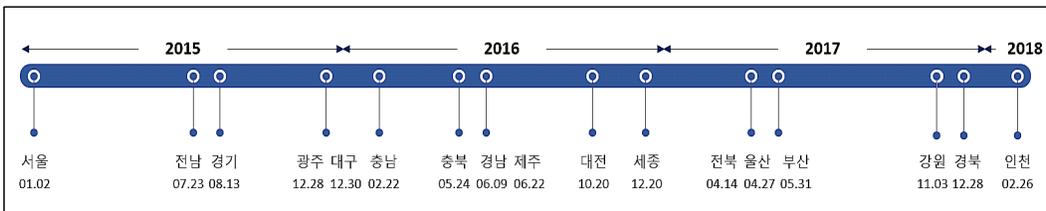


청년 참여제도 사례조사

1. 사례조사 개요

- 본 연구는 인천시 청년들의 참여 수준을 파악하고, 참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본 연구는 인천시 청년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로서 ① 서울특별시, ② 광주광역시, ③ 경상남도, ④ 제주특별자치도 등 4곳을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함.
 - 사례조사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청년에 관한 기본 조례를 초창기(2015~2016년)에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로서 청년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온 특징을 지님.
 - 서울시는 광역·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 「청년 기본 조례」를 최초로 제정함. 지역의 정책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 등에도 청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명문화함¹⁴⁾.
 - 광주시는 서울시와 더불어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 중인 곳임. 2026년까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시와 경상남도뿐임.

[그림 3-1] 광역자치단체별 「청년 기본 조례」 제정 현황



- 주: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조회하여 「청년 기본 조례」의 제정일 순으로 나열한 것임.
 2)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청년 기본 조례」는 정부의 「청년기본법」보다 앞서 제정됨.

14)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이외에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운영과 청년자율예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 내용은 제3장 제2절을 참고.

- 경상남도 청년특별도를 선언하며, 전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시행 중인 곳임.
2026년까지 ‘청년인구 유출 제로화’를 선언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제주도는 국회사무처가 소관하는 (사)청년과 미래로부터 3년 연속 청년친화현정대상 종합대상을 받은 광역자치단체임. 청년정책 추진에 대표적인 도시로 꼽히고 있음.
- 사례조사 대상 4곳의 청년 참여 관련 ① 제도, ② 청년 참여 관련 기구, ③ 공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제도: 자치법규(조례),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검토함.
 - 공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형태로 제공하는 청년공간을 살펴봄.
 - 위원회 및 네트워크: 청년정책을 포함한 제반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참여기구를 조사함.

2. 서울특별시

1) 제도

(1) 조례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을 통한 권익증진 및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청년에 관한 기본 조례는 서울시가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 최초 제정함. 2015년 1월 시행됨. 정부가 2020년 제정·시행한 「청년기본법」보다 5년 먼저 제정함.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www.law.go.kr)에서 ‘청년’을 주제로 조례를 검색한 결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전에는 청년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내용을 위주로 조례가 제정됨. 청년취업/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청년 일자리의 창출 촉진, 청년인턴제 운영,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됨.
 - 조례는 목적, 청년의 정의, 위원회, 시설,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표 3-2]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주요 내용

- 제1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3조 제1호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함¹⁵⁾.
- 제10조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의 결정 과정에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함.
- 제10조 제2항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청년이 제안한 시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할 수 있음.
- 제10조 제3항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일정률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구성해야 함.
- 제10조의3 제1항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 추천할 청년위원의 선정을 위해 청년인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제17조 시장은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환경 조성 방안을 다채롭게 모색해야 함.
- 제20조 및 제21조 시장은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설과 기관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음
- 제22조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15) 제정 조례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 청년정책 대상자의 상한은 만 34세 이하로 설정됨. 2020년 10월 조례를 개정하며 청년의 범위를 현행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까지로 확대한 것임.

- 2018년 3월에는 서울시 내 청년공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함.
- 2020년 10월에는 서울시 예산편성과정 등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함.

(2) 기본계획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조례 제6조).
- 서울시는 2015년 11월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청년정책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들을 제시함(서울혁신기획관, 2015).
 - 비전은 ‘청년의 활력으로 기대되는 서울’로 설정함.
 - 추진방향은 세 가지로 ① 청년당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상호신뢰), ② 실효성 있는 정책의 발굴과 추진(육구존중), ③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등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미래투자 관점에서의 전환임(미래지향).
 - 핵심사업은 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보장 지원(설자리), ② 좋은 일자리 경험을 위한 뉴딜일자리 확대(일자리), ③ 1인 청년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 확대 및 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살자리), ④ 청년과 사회를 연결하는 활동공간 조성 및 지원임(놀자리).
- 2021년에는 기존의 청년정책이 거둔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여 2025년까지 적용할 「2025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함(미래청년기획단, 2021).
 - 비전은 ‘다시 뛰는 서울, 가슴 뛰는 청년’으로 설정함.
 - 목표는 두 가지로, ①이행기 생활안전망의 구축, ②청년들의 역량 강화임.
 - 추진방향은 ①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청년 점프(JUMP)), ② 이행기의 불편·불안으로부터 청년들을 구조해주는 정책(청년 세이프(SAVE)), ③ 청년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제거(청년 패스(PASS)) 등 세 가지를 수립함.
- 현행 기본계획에서 참여 관련 정책은 추진방향 3가지 중 청년 패스(PASS)에 속함.

- 세부 실행계획으로 청년들의 신체 건강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지역별 집합 체육 프로그램 운영, 청년토론회 등의 정례화, 청년문화공간 혁신거점의 조성, 온라인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함.

(3) 시행계획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 내용을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함(조례 제7조).
- 2022년 시행계획에서 청년의 참여와 권리 분야 추진과제는 총 7건임(전체 48건). 예산규모는 약 145.1억 원으로 전체 청년정책 예산(9,282억 원)의 1.56%임(미래청년 기획단, 2022)¹⁶⁾.
 - 추진과제 1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재를 발굴·육성 및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임.
 - 웹툰 배포, 뉴스레터 제작, 청년 정책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서울의 미래인재 군(pool)을 확대하기로 함.
 - 추진과제 2는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운영과 서울청년시민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것임.
 - 서울시 정책과정의 청년참여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위원 모집방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정책 기획역량 강화와 제안정책 고도화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을 계획함.
 - 추진과제 3은 자치구의 청년참여기구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을 독려하는 것임.
 - 각 자치구가 특색 있고 우수한 정책을 발굴·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책 컨설팅 등의 지원을 계획함.
 - 추진과제 4는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을 통해 청년과 기업(단체) 간의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에 관한 정책연구와 지원사업을 내실화하는 것임.
 - 청년허브가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육성하여 일과 삶에 대한 의지를 발굴하고, 미래 일자리(청년창업) 모형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16) 2022년 시행계획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분야는 주거 분야임. 추진과제의 수는 총 7건(전체 48건)이며, 예산 규모는 약 6,661억원으로 전체 청년정책 예산의 71.8% 수준임. 주거 분야 다음은 일자리 14.2%(1,317억 원), 복지·생활·금융 11.8%(1,095억 원), 참여·권리 1.6%(145억 원), 교육·문화 0.7%(65억 원) 순임.

- 추진과제 5는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시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활동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임.
 - 무중력시대가 추진해 오던 사업과 운영인력을 정비하고, 2023년에는 서울청년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자치구 협의 등을 계획함.
- 추진과제 6은 서울청년센터의 설치·운영 확충을 지속하고, 기 제공 중이던 서비스의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임.
 - 2022년에는 강서구와 강북구, 성북구 등 3곳에 신규 센터를 조성·운영할 것을 계획함.
 - 청년센터의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기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함.
- 추진과제 7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운영을 안정화하고 청년활력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기획해 추진하는 것임.
 - 지역별 청년센터의 운영인력 양성과 관리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자체 사업·정책 프로그램의 운영을 고도화할 것을 계획함.

2) 청년 참여 관련 기구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서울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 2015년 조례 제정 시에는 ‘청년정책위원회’로 명명하며 위원회를 설치함. 정부가 2020년 「청년기본법」을 제정·시행하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규정한 것을 고려해 같은 해 10월 조례를 개정함. 이후 현재까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규정돼 있음.
 - 주요 심의·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조례 제9조 제2항).
 -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 청년친화위원회(서울시 각종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 그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함(조례 제9조 제3항).
 -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임명함.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함.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함.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그 직무를 대행함(조례 제9조 제6항).
 - 당연직 위원은 혁신·경제·주택·복지·문화 등에 관한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함(조례 제9조 제4항).
 -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50% 이상은 청년으로 구성해야 함(조례 제9조 제5항)¹⁷⁾.
-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조례 제9조 제10항), 각종 사무의 처리를 위한 간사는 서울시 내에서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수행함(조례 제9조 제11항).
 - 2022년 7월 기준으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행정(1)부시장의 보좌기구 중 하나인 미래청년기획단임¹⁸⁾.
-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의 50%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50% 이상이 찬성하여야 의결한 것으로 봄(조례 제9조 제9항).
 - 정기회의 이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위원회 위원에게는 2년의 임기를 부여하며, 연임은 1회만 가능함(조례 제9조 제7항).
 -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큼을 임기로 하며,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함.

17)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서울시의회 의원, 청년단체 등에서의 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18)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조직도(org.seoul.go.kr),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등을 참고함.

(2) 청년정책네트워크

-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서울시의 예산편성 과정을 포함한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구로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음.
 - 서울시는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활동을 통해 운영되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청년의 참여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모색함(조례 제2조 및 제3조).
 -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조례 제8조).
 - 청년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정책 및 기존 정책의 개선사항 제시
 - 청년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심의·조정
 -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를 통한 합의사항 건의
-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남·녀 위원장 1명씩을 포함한 5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함(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
 - 위원장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하며, 남·녀 1명씩을 공동위원장으로 함.
 -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 공개 모집함(조례 제3조 제1호 및 제9조 제2항).
 -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조례 제9조 제3항).
 -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조례 제9조 제4항).
-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수월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분과를 설치할 수 있으며(조례 제7조 제2항), 각종 사무의 처리를 위한 간사를 둘 수 있음(조례 제7조 제4항).
 - 운영위원회는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함(조례 제13조 제1항).
 -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정책 개선과 청년자율예산안 논의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와 기획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
 - 회의 개최에 따른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

- 2022년 현재 청년정책네트워크는 6개 분과(일자리/창업, 주거, 문화예술, 평등/인권, 사회안전망, 기후환경)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음¹⁹⁾.
-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에게는 1년간의 임기를 부여함(조례 제10조 제1항).
 -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큼을 임기로 함(조례 제10조 제2항).
-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서울청년시민회의라는 총회를 개최함(조례 제12조 제1항).
 - 회의의 목적은 정책과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하는 데 있음(조례 제12조 제2항).
 - 최종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 온라인 정책패널과 일반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절차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조례 제12조 제4항).
 - 총회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으로부터 절차에 따른 발언권을 얻어야만 발언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운영위원회가 정함(조례 제12조 제5항).
 - 회의는 위원의 1/3 이상이 출석하여야 성립되며, 출석위원의 50% 이상이 동의하여야 의결한 것으로 봄(조례 제12조 제3항).
 - 회의에서 의결한 청년자율예산 편성안은 서울시 예산안과 함께 서울시의회에 제출됨(조례 제12조 제6항).

3) 공간

(1) 청년센터 오랑²⁰⁾

- 서울청년센터 오랑은 청년의 생활권 인근에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정책 전달체계 중 하나임(서울특별시 청년청, 2020).
 - 2022년 7월 기준으로 지역별 청년센터의 사업 총괄과 관리·감독, 소통 업무 등은 서울시 내 행정(1)부시장의 보좌기구 중 하나인 미래청년기획단이 수행 중임²¹⁾.

19)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 2022년 분과 소개(youth.seoul.go.kr/site/youthnet/content/NET020-01#none) 내용을 참조함.

20) 서울청년포털 - 서울청년센터 오랑 게시글을 참고함(youth.seoul.go.kr/site/main/center/center_orang).

21) 서울특별시 청년청(2020)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조직도(org.seoul.go.kr) 등을 검토하여 확인함.

- 지역별 청년센터의 전문인력 양성과 실적·성과관리 등의 운영 총괄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담당함²²⁾.
 - 각 청년센터의 사업 운영은 해당 청년센터가 위치한 자치구에서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모하여 진행함(서울특별시 청년청, 2020).
- 서울청년센터 오랑은 2022년 현재 12개소가 설치·운영 중임²³⁾.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개의 자치구에 청년센터 오랑이 설치됨²⁴⁾. 각 청년센터의 규모가 상이하여 제공하는 대관시설의 종류와 개수에 차이가 있음.
 - 기본적으로 개인 공부와 휴식을 위한 공간(오픈 라운지), 소규모 모임과 회의를 위한 공간(회의실) 등을 1개 이상씩은 갖춤.
 - 대관은 대체로 평일(월~금요일) 기준 10:00~22:00(경우에 따라서는 18:00까지), 토요일은 10:00~17:00(경우에 따라서는 18:00 또는 22:00까지) 이용이 가능함. 일요일과 공휴일은 모든 곳이 휴관하여 이용이 불가함.
 - 각 청년센터에서는 전문 매니저나 또래 청년들과의 상담, 청년의 취업과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2) 청년활동지원센터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서울청년센터의 구심점으로서 청년정책 정보의 집적과 관리, 청년지원전문인력의 양성, 청년지원 생태계 확대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와 홍보, 자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함²⁵⁾.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됨.
 - 청년의 능력개발과 진로모색 사업 등을 통한 구직활동 지원
 -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자립지원 등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 청년지원 전문인력의 육성
 - 각 자치구의 청년정책 전달체계(서울청년센터)의 지원, 교육, 평가

22) 서울특별시 청년청(2020) 및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 사업소개(sygc.kr/business01)를 참고함.

23) 서울청년센터 홈페이지 - 안녕! 오랑(youth.seoul.go.kr/site/orang/center/center_orang) 내용을 참고함.

24) 강서구, 은평구, 마포구,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25) 서울특별시 청년청(2020) 및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 사업소개(sygc.kr/business01) 등을 참고함.

-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2022년 현재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과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컨버전스 협회가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2016년 개설 당시부터 2021년까지는 사단법인 마을과 일촌공동체가 위탁·운영함.
 -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임(조례 제10조 제5항).
- 청년활동지원센터는 현재 대관이 가능한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자체 프로그램과 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한 공간은 갖추고 있음.
 -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 사회참여 활동 독려, 서울청년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3) 청년허브

- 청년허브는 청년의 활동과 교류,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의 청년정책 전달체계 중 한 곳임²⁶⁾.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됨.
 -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공간 운영의 지원
 - 국내·외 청년네트워크의 구축과 소통체계 활성화
 - 청년의 취·창업 등 일자리 진입 관련 시책 개선과 혁신사업의 실행
 - 청년정책의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와 공유
 -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021년부터 사단법인 씨즈(SEED:S)가 위탁운영하고 있음²⁷⁾.
 - 청년허브 홈페이지에는 청년에 관한 자체 연구(기획연구, 공모연구)와 외부 연구자료, 청년허브가 활동을 지원 중인 모임과 단체 관련 정보가 게시되어 있음.
- 청년허브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26)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홈페이지(youthhub.kr) - 청년허브 소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27)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함(조례 제10조 제5항).

- 행사와 교육, 모임 등이 가능한 세미나실(25명 내외)과 창문형 카페(30명 내외), 다목적홀(최대 150명) 등을 보유하고 있음.
- 대관은 평일에만 가능하며, 공간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상이함.
 - 세미나실은 10:00~22:00, 다목적홀은 09:00~19:00 중에 예약할 수 있음.
 - 창문형 카페는 카페 운영이 종료한 19:00~22:00에만 대관이 가능함.

(4) 무중력지대

- 무중력지대는 청년의 자발적 움직임을 보장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임. “자유롭게 놀고, 함께 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임²⁸⁾.
 - 무중력지대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의 관리·감독 하에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서울문화재단, 2020.07; 고보현, 2021.12.02; 안승진, 2022.06.17)²⁹⁾.
- 무중력지대는 2022년 현재 7개소가 설치·운영 중임³⁰⁾.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가량에 무중력지대가 분포해 있음³¹⁾.
 - 앞서 소개한 서울청년센터 오랑은 12개 자치구³²⁾에 1개소씩 마련되어 있었음. 무중력지대는 6개 자치구에 7개소가 분포해 있음. 두 명칭의 청년공간이 서로 다른 자치구에 분포하며 중첩되지 않고 있음. 상호 보완적 위치에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³³⁾.
 - 각 공간마다 규모가 상이하여 제공하는 대관시설의 종류와 개수에 차이가 있음.
 - 청년의 모임과 교육, 활동 등의 개최가 가능한 공간을 1개 이상씩 갖추고 있음.
 - 대관은 대체로 평일(월~금요일) 기준 10:00~22:00(경우에 따라 19:00 또는 21:00까지), 토요일은 10:00~17:00(경우에 따라 16:00, 18:00, 19:00까지) 이용이 가능함. 일요일과 공휴일은 모든 곳이 휴관하여 이용이 불가함.

28) 무중력지대는 “청년을 구속하는 사회의 중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무중력지대 홈페이지(youth.seoul.go.kr/site/youthzone) - 안녕, 무중력지대! 소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29)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임(조례 제10조 제5항)

30) 서울청년센터 홈페이지 - 안녕! 오랑(youth.seoul.go.kr/site/orang/center/center_orang) 내용을 참고함.

31)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대문구(2개소), 성북구, 도봉구

32) 강서구, 은평구, 마포구,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33) 최근 보도된 언론 자료에 따르면(서울신문, 2022.06.17), 서울시는 무중력지대, 청년교류공간 등을 2023년부터 서울청년센터 오랑과 일원화할 계획임.

- 각 무중력지대마다 청년의 마음건강, 사회참여, 생활지원, 신체건강, 진로, 창업, 문화예술, 대외활동 등을 주제로 한 자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5) 청년교류공간

- 청년교류공간은 청년을 주제로 한 교류와 협업, 문제해결 시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임³⁴).
 - 2022년 현재 주식회사 오픈놀이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음³⁵).
 -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임(조례 제10조 제5항).
- 청년교류공간은 마포구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있음³⁶).
 - 간단한 주방기구를 갖춘 공간, 입주단체 업무를 위한 공간, 강연이나 회의·모임 등을 위한 공간, 그리고 휴게시설을 갖춘 옥상을 보유하고 있음.
 - 대관은 평일(월~금요일) 10:00~22:00 및 토요일 10:00~16:00 동안에만 가능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불가함.
 - 청년교류공간에서는 청년의 마음건강, 사회참여, 신체건강, 진로, 문화예술, 교류 등을 주제로 한 자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6) 청년포털

- 서울시는 청년정책의 접근성과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공간으로서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청년정책의 방향과 대상별·연령별·분야별 정책정보,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 이용 가능한 청년공간, 관련 연구 결과 등을 게시하고 있음.
 -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도 종합하여 지역별·정책유형별·취업상태별·학력별·연령 등에 따른 세부사업을 비교·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중임.

34) 서울청년센터 홈페이지 - 청년교류공간(youth.seoul.go.kr/site/main/content/exch_intro) 내용을 참고함.

35)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홈페이지(youth.seoul.go.kr/site/bridge)를 참고함.

36) 서울청년센터 홈페이지 - 청년교류공간 공간대관(youth.seoul.go.kr/site/main/content/exch_rental) 참고함.

[그림 3-3] 서울청년포털 모습

The screenshot displays the Seoul Youth Portal (youth.seoul.go.kr)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Seoul City logo and various utility links. Below this is a main banner for a 'Future Youth Job Participation Event 2nd' (미래 청년 일자리 참여자 모집 2차). The banner includes the event dates (2022.7.13. (수) 09:00 ~ 7.22. (금) 18:00) and a list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온라인콘텐츠 (Online Content), 소셜벤처 (Social Venture), and 제로웨이스트 (Zero Waste). Below the banner is a '주간 Best' (Weekly Best) section with categories like '서울시 청년수당' (Seoul City Youth Allowance) and '대중교통비 지원' (Public Transport Support).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서울시 청년 정책' (Seoul City Youth Policy) section with filters for '대상 선택' (Target Selection) and '연령 선택' (Age Selection). Below this are various service icons such as '전체분야선택' (All Fields Selection), '진로' (Career), '일자리' (Job), '창업' (Startup), '주거' (Housing), '생활지원' (Living Support), '금융' (Finance), '신체건강' (Physical Health), '마음건강' (Mental Health), '교육' (Education), '문화/예술' (Culture/Art), '사회참여' (Social Participation), '커뮤니티' (Community), '대외활동' (Overseas Activities), and '공간' (Space). At the bottom, there are sections for '청년지원정보' (Youth Support Information) and '서울시 청년기관' (Seoul City Youth Organizations), each listing various programs and their details.

주: 2022년 7월 1일 기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3. 광주광역시

1) 제도

(1) 조례

-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청년의 참여 확대와 자립기반 형성 등으로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청년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해당 조례는 2015년 12월 제정됨.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4번째에 해당함.
 - 조례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의무, 관련 조직과 시설 등을 다루고 있음.

[표 3-3] 광주시 청년기본조례 주요 내용

- 제1조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2조 제1호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함.
- 제11조 제1항 시장은 광주시의 각종 위원회 등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제9조 시장은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 기회 보장과 의견 반영을 위한 청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의 활동을 독려하며 제안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 제11조 제1항 시장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위원의 수를 파악하고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제10조 및 제20조 시장은 청년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시설과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 제21조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2) 기본계획

-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조례 제5조).
 - 기본계획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며, 계획기간 내 언제라도 기본계획을 평가·분석하여 재조정할 수 있음(조례 제5조 제3항).
- 광주시는 2016년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청년정책 목표와 분야별 추진전략 및 과제들을 제시함(광주광역시, 2016).
 - 비전은 '당당한 광주 청년, 활력 넘치는 청년 광주'로 설정함.
 - 목표는 두 가지로, ① 청년의 일상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 ② 청년의 참여와 역량을 통해 도시를 변화시키고 활력 제고하는 것임.

- 주요 가치로는 권리, 참여, 지속성, 연대, 실험, 공유 등 6가지를 제시함.
- 분야별 추진전략은 ① 청년의 고용기반 확대(일자리 분야), ② 청년의 사회적 가치의 추구하고 실천 역량 강화(지역인재 분야), ③ 청년의 생활안정 기반의 조성(복지 분야), ④ 청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문화 분야) 등 네 가지를 수립함.
- 정책추진을 위한 실천전략으로는 ① 청년 스스로 내적 문제와 외적 환경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주체화 전략), ② 청년의 문제가 지역에서 공론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의제화 전략), ③ 청년 활동의 생태계 기반을 법적·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제도화 전략), ④ 청년정책을 시책의 전면에 배치하고 부서를 가로지르는 통합적 실행을 추진하는 것(주류화 전략), ⑤ 지역의 자원·사람·공간이 포괄적으로 협력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것(협력화 전략) 등 다섯 가지를 설정함.
- 2022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청년 문제와 중앙정부 청년정책 등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적용할 제2차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함(광주광역시, 2022).
 - 비전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시민 중심도시 광주’로 설정함.
 - 목표는 두 가지로 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청년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 ② 청년문제 해결을 통해 청년광주의 미래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임.
 - 주요 가치로는 자립, 안전, 즐거움, 참여, 연대 등 5가지를 제시함.
 - 분야별 추진전략은 ①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일자리 분야), ② 청년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주거 공간 조성(주거 분야), ③ 청년시민의 사회활동 역량 강화(교육 분야), ④ 청년의 안전한 삶과 즐거운 일상 실현(복지·문화 분야), ⑤ 참여와 연대로 지속가능한 청년도시 조성(참여·권리 분야) 등 다섯 가지를 수립함.
- 현행 기본계획에서 청년의 참여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섯 가지임.
 - 주요 정책과제로 ① 각 기초자치단체에 청년센터의 설립과 운영, ② 광주시민참여예산 위원회 내에 청년분과 신설, ③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청년참여 창구의 다원화, ④ 청년 혁신 프로젝트 활성화, ⑤ 세대 간 연대 프로젝트 활성화 등을 제시함.

(3) 시행계획

-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 내용을 「광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하고 있음(조례 제6조).
- 2022년 시행계획에서 청년의 참여와 권리 분야 추진과제는 총 10건임(전체 84건). 예산규모는 약 19억 원으로 전체 청년정책 예산(871억 원)의 2.18% 수준임(광주광역시, 2022)³⁷⁾.
 - 추진과제 1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임.
 - 청년정책 관련 최고의 심의기구로서 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중앙정부 및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광주시 자치구 위원회들과 교류·연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계획함.
 - 추진과제 2는 청년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임.
 - 제7기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4회 이상의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추진하여 청년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계획함.
 - 추진과제 3은 청년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청년정책 주요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현장 전문가와 활동가 등의 의견 청취로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것임.
 - 자문단은 정책분야별 청년정책 전문가(청년 활동가 포함)로 구성하고, 현안 발생 시 수시로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계획함.
 - 추진과제 4는 청년일자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일자리의 창출 촉진과 지원, 일자리 질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는 것임.
 - 위원회는 청년일자리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현안 발생 시 수시로 소집하여 관련 회의를 진행할 것을 계획함.
 - 추진과제 5는 광주청년센터의 운영을 통해 청년의 일상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청년의 사회진입과 지역 정착, 활동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임.
 -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고, 취·창업 등 일자리 부문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함.

37) 2022년 시행계획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분야는 일자리 분야임. 추진과제의 수는 총 35건(전체 84건)이며, 예산 규모는 약 395.5억원으로 전체 청년정책 예산의 45.4% 수준임. 일자리 분야 다음은 주거 22.3%(194억원), 교육 16.2%(140.8억원), 복지·문화 14%(121.9억원), 참여·권리 2.2%(19억원) 순임.

- 추진과제 6은 청년의 소통과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장으로서 광주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하는 것임.
 -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청년의 정책과 문화를 공유하고 교류·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함.
- 추진과제 7은 광주시에서 활동 중인 청년공동체를 발굴하고, 관련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독려하는 것임.
 - 신규 단체의 발굴을 위해 홍보를 다각화하고, 전문가 교육과 연계·자문, 활동비 지원, 사업성과 공유회 개최 등으로 청년공동체의 지역사회 공헌 기반 강화를 계획함.
- 추진과제 8은 광주청년정책 플랫폼(광주청년센터 홈페이지) 내 게시 정보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청년들의 정책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임.
 -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홍보 강화를 통해 이용자를 확대 지속적인 운영·관리와
- 추진과제 9는 마을청년 활동가를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것임.
 - 광주시 마을현장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청년 9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계획을 수립함.
- 추진과제 10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을 운영하여 청년의 건강문제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것임.
 - 대졸 미취업자 10명을 청년사업단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채용하여 청년층의 신체와 정신 건강,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등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을 계획함.

2) 청년 참여 관련 기구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광주시 청년정책에 관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심의·의결기구임.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 2015년 조례 제정 시에는 ‘청년정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위원회를 설치함. 정부가 2020년 「청년기본법」을 제정·시행하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규정한 것을 고려해 2021년 2월 조례를 개정함.

-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음(조례 제8조 제2항).
 -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청년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50
- 을 포함한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함(조례 제8조 제3항).
 -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로 함.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그 직무를 대행함(조례 제8조 제5항 및 제6항).
 -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50% 이상은 청년으로 구성해야 함(조례 제8조 제4항)
 - 경제·일자리·주택·복지·문화 등에 관한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과 광주시의원 2명
 - 광주시 청년위원회 의장단
 - 청년단체 활동 경험이 풍부한 자
 -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회의 사무의 처리를 위한 간사는 광주시 내에서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함(조례 제8조 제7항).
 - 2022년 7월 기준으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행정부시장의 보좌기구 중 하나인 청년정책관임³⁸⁾.
- 위원회는 연 3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의 50%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50% 이상이 찬성하여야 의결한 것으로 봄(조례 제8조 제11항).
 - 정기회의 이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38)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조직도(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lId=www147),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등을 참고함.

- 위원회 위원에게는 2년의 임기를 부여하며, 연임은 1회만 가능함(조례 제9조 제8항).
 -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큼을 임기로 함.

(2) 청년위원회

- 청년위원회는 광주시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구로서,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9조를 근거로 하고 있음.
 - 청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조례 제9조 제2항).
 - 청년 의견수렴과 청년정책의 제안, 청년 문제의 발굴·조사와 개선방안 모색, 이미 형성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참여
 - 국내·외 청년단체 및 협의체와 교류·협력,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 청년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
 - 2022년 현재 청년위원회는 4개 분과(경제·일자리, 교육·진로, 문화·삶의 질, 참여·소통)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음(정창남, 2022.03.25).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남녀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한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함(조례 제9조 제3항).
 - 위원회 위원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 공개 모집함(조례 제9조 제4항).
 -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함.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조례 제8조 제9항).
 - 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의 50%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50% 이상이 찬성하여야 의결한 것으로 봄(조례 제8조 제8항).
 -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3) 공간

(1) 청년센터 공유공간

- 광주청년센터는 광주시 청년정책을 홍보·연구하며, 청년의 활동과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간지원조직임.
 -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 및 제20조 등을 설치·운영의 근거로 하고 있음.
 - 청년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조례 제10조 제2항).
 - 광주시 청년센터 사업 계획의 수립과 수행
 - 청년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연구·조사, 민관협력 활성화
 -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 보호, 능력개발, 자립 등을 위한 활동 지원 및 발굴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동 등
 - 2016년부터 사단법인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가 위탁운영하고 있음.
 - 시장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민간위탁 및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임(조례 제10조 제4항).
- 광주청년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예약 없이 사용이 가능한 ‘쉬어가는 공간’과 예약이 필요한 ‘모임 공간’으로 구분됨.
 - 모임 공간의 경우에도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시간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함.
 - 쉬어가는 공간으로는 독서나 담소 등이 가능한 공유홀 1·2, 조리는 불가하지만 취식은 가능한 공유주방, 그리고 옥상 등이 있음.
 - 모임 공간으로는 개인 공부나 회의·모임을 위한 공간(공간별로 4~10명 내외), 행사와 교육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30명 내외) 등이 있음.
 - 대관은 평일(월~금요일) 10:00~20:30 및 토요일 09:30~17:30 동안에만 가능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불가함.

(2) 청년센터 홈페이지

- 광주시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공간으로서 광주청년센터 홈페이지(www.gjyouthcenter.kr)를 운영하고 있음.

- 신청 가능한 광주시의 청년정책 사업과 광주청년센터 내 운영 프로그램 등을 게시하고 있음. 자신이 경험한 정책 후기를 남기거나 질의, 제안하는 공간도 마련해 둠.
- 정책 유형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신에게 적합한 청년정책 사업을 검색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중임.

[그림 3-4] 광주청년센터 홈페이지 모습



주: 2022년 7월 1일 기준, 광주청년센터 홈페이지(www.gjyouthcenter.kr)

4. 경상남도

1) 제도

(1) 조례

-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의 참여기회 보장과 권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해당 조례는 2016년 12월 제정됨.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8번째에 해당함.
 - 광주시 청년기본 조례는 목적, 청년의 정의, 도지사의 의무, 시설 및 기관 등을 명시함.

[표 3-4] 경상남도 청년기본조례 주요 내용

- 제1조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상남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3조 제1호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함.
-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도지사는 경상남도의 각종 위원회 등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제15조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제16조 및 제17조 도지사는 청년의 활동과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 제18조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2) 기본계획

-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조례 제6조).
- 경상남도는 2019년에 「경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청년정책 목표와 추진체계, 분야별 추진과제 등을 제시함(경상남도, 2019).
 - 비전은 ‘경남청년 꿈을 기회로, 기회를 성장으로’로 설정함.
 - 정책목표는 3개 부문(일터, 삶터, 놀이터)별로 3개씩 총 9가지를 수립함.
 - 일터 부문: ① 청년의 창업기반 확대, ② 산·학·연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③ 지역인재 육성 및 일자리 연계

- 삶터 부문: ① 청년의 부채 감소, ② 니트·아르바이트·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③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 놀이터 부문: ① 청년 문화의 육성, ② 청년 활동공간의 조성, ③ 청년정책 전문 활동가의 양성
- 2021년 3월에는 중앙정부 청년정책과의 조율 등을 위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제1차 「경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정 발표함(경상남도, 2021.03).
- 비전은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청년특별도 조성’으로 변경함.
 - 목표는 네 가지로, ① 청년과 함께, 청년이 직접, ②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청년정책, ③ 주거 등 생활안정, ④ 정부, 수도권과 협력 등을 수립함.
 - 청년의 참여와 권리에 관한 주요 정책 과제로는 ① 경상남도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주도성 확대, ② 청년정책 추진기반의 마련과 내실화, ③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의 확립, ④ 청년의 권익 보호와 청년교류의 활성화 등 네 가지를 제시함.
- 2021년 10월에는 기본계획을 수정 발표하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실천해 나갈 「경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소개함(경상남도, 2021.10).
- 비전은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으로 설정함.
 - 목표는 ‘2026년까지 청년인구 유출 제로화’로 선언함.
 - 주요 전략으로는 ① 청년친화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 ② 기업 맞춤형 인재와 청년혁신가 양성, ③ 청년 유입을 위한 지역 매력도 향상, ④ 청년 직접 지원 강화 등 네 가지를 제시함.
- 현행 기본계획에서 청년의 참여와 권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는 네 가지임.
- ① 청년정책네트워크 확대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의 개발과 청년참여 환경의 활성화, ② 청년친화적 문화 조성 및 진로개발 지원, ③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청년 친화적 기반 강화, ④ 청년정책 소통 강화 등임.

(3) 시행계획

-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 내용을 「경상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으로 이행하고 있음(조례 제7조).

- 2022년 시행계획에서 청년의 참여와 권리 분야 추진과제는 총 16건임(전체 117건). 예산규모는 약 77억 원으로 전체 청년정책 예산(1,182억 원)의 6.52%수준임(경상남도, 2022)³⁹⁾.
 - 추진과제 1은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기존의 청년정책을 점검하고, 청년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통한 신규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것임.
 - 2022년에는 청년위원 237명가량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2026년에는 255명까지 모집하여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추진과제 2는 청년층의 성 불평등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임.
 - 청년 25명(4개팀)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세대의 성 불평등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과 홍보, 전시회, 공론화 등의 추진을 계획함.
 - 추진과제 3은 경상남도 청년과 청소년의 도정 참여 역량을 조성하는 것임.
 - 청소년(만 9~24세)과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분야별 정책사업을 제안받고 심의하여 본선 진출작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계획함.
 - 추진과제 4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 계획을 알리고, 2개 시·군을 선정하여 사업 지원을 시행하는 것임.
 - 2020년에는 거제시와 남해군이, 2021년에는 밀양군과 함안군이 선정됨.
 - 공모 사업에 선정된 2개 시·군은 지역당 1년차 16억 원, 2년차 10억 원을 지원받음.
 - 공모 대상은 청년의 참여·활동 촉진과 생활 안정, 권리보호, 능력개발, 문화 진흥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적 사업임.
 - 추진과제 5는 청년친화도시 세부사업 중에서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특화사업 지원 등을 실시하여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임.
 - 다른 시·군으로 확산할 가치가 있거나 청년친화도시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만한 사업이 지원 대상임.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사업비 규모는 시·군당 10억원 수준임.
 - 추진과제 6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임.

39) 2022년 시행계획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분야는 일자리 분야임. 추진과제의 수는 총 50건(전체 117건)이며, 예산 규모는 약 783억원으로 전체 청년정책 예산의 66.2% 수준임. 일자리 분야 다음은 주거 12.1%(142.6억원), 복지·문화 8.1%(95.6억원), 교육 7.1%(83.8억원), 참여·권리 6.5%(77.1억원) 순임.

- 타 지역 청년들이 일정기간 경상남도 시·군에 살아보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상남도로의 이주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임.
- 추진과제 7은 동남권 및 수도권 청년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경상남도 청년정책의 내실을 강화하는 것임.
 - 청년단체 간 실무 협의 간담회와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행사 등의 개최를 계획함.
- 추진과제 8은 우수 사례 중심의 이야기하기(storytelling) 홍보 등을 통해 청년정책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제고하는 것임.
 - 청년 관련 부서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매체를 일원화하여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자 함.
- 추진과제 9는 지역별 청년공간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 시·군별 유희공간을 개선(remodeling)하여 지역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2022년에는 5개소에 대한 지원을 계획함.
- 추진과제 10은 지역별 청년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는 것임.
 - 경상남도 내 시·군 중에서 2022년 12월까지 중간지원조직 운영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1개 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과제 11은 청년이 주도하여 기획·추진하는 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하는 것임.
 - 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회의, 공연, 문화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을 계획함. 청년 1,050명의 참여를 목표로 함.
- 추진과제 12는 청년공동체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과 활력을 제고하는 것임.
 - 청년공동체는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상임. 총 10개팀에게 8백만원씩의 과제수행비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함.
- 추진과제 13은 지역의 자원과 문화 등에 바탕을 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계획 또는 시행 중인 청년을 육성·지원하는 것임.
 - 사업 대상은 경상남도 내 청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표자임.
- 추진과제 14는 경남청년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연계·협력을 도모하는 것임.

- 추진과제 15는 섬 지역의 유휴공간을 청년의 창작공간으로 조성·제공하거나 한달살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섬 방문객을 늘리고, 청년과 주민의 상생을 지원하는 것임.
 - 2022년에는 통영시 두미도를 대상으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진행을 계획함.
- 추진과제 16은 시·군별 청년농업인 간의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임.
 - 청년농업인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간 임대료나 회의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함.
 - 지원 대상은 만 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임.

2) 청년 참여 관련 기구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경상남도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기 위한 기구로,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 2016년 설립 당시에는 ‘청년정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치함. 정부가 2020년 「청년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규정한 것을 고려하여 경상남도도 2021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명함.
 - 주요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조례 제9조 제2항).
 -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함(조례 제9조 제3항).
 - 위원장은 도지사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당연직 위원은 기획·고용·기업·복지·교육·주거·문화 등 청년정책에 관한 부서의 장으로 함(조례 제9조 제4항).
 -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50% 이상은 청년으로 구성해야 함(조례 제9조 제5항).

-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년단체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조례 제9조 제10항), 간사를 두어 각종 사무의 처리하게 함(조례 제9조 제11항).
 - 2022년 7월 기준으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도지사의 보좌기구 중 하나인 청년정책추진단임⁴⁰). 간사는 이 부서의 구성원 중 하나가 수행함.
- 위원회 위원에게는 2년의 임기를 부여하며, 연임은 1회만 가능함(조례 제9조 제7항).
 -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큼을 임기로 하며,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함.
- 위원회는 연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의 50%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50% 이상이 찬성하여야 의결한 것으로 봄(조례 제9조 제9항).
 - 정기회의 이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2) 청년정책네트워크

-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경상남도의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와 의견 반영을 위한 기구로서,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의2를 근거로 하고 있음.
 -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조례 제10조의2 제2항).
 - 청년 의견수렴과 청년정책의 제안, 청년 문제의 발굴·조사와 개선방안 모색
 -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참여
 -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정책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모집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지사가 정함(조례 제10조의2 제3항).
-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당초 100명 내외의 청년위원으로 구성되었다가 핵심 참여인력 250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음⁴¹).

40)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조직도,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등을 참고함.

- 위원회 임기는 약 1년임. 2018년 개설되어 2022년 현재 4기가 활동 중임.
 - 제1기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05명의 청년위원이 활동함. 6개의 분과(권리보호, 일자리, 생활안정, 능력개발, 문화, 청년참여)로 구성됨. 총 9개의 청년정책을 제안하였고, 7개가 수용됨.
 - 제2기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94명의 청년위원이 활동함. 11개의 분과(인구, 주거, 사회적 경제, 금융 등)가 총 14개의 정책을 제안하였고, 9개가 수용됨.
 - 제3기는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1,200명(오프라인 250명, 온라인 950명)의 청년위원이 활동함. 핵심 참여인력 250명은 16개 분과(교육, 농어업, 기후위기대응, 창업 등)에서 토론과 숙의를 거치며 31개 정책을 제안함. 온라인 패널이 제안한 정책(37건)은 정책자문단 심사를 거쳐 9건으로 추려짐. 총 40개 정책이 제안되었고, 16개가 수용됨.
 - 제4기는 2022년 1월부터 약 1년여의 활동을 시작함. 237명의 청년위원이 모집되었으며, 16개 분과(교육, 일자리, 마음건강 등)로 나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3) 공간

(1) 청년센터 공유공간

- 경남청년센터는 경상남도 청년들의 다분야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중간지원조직임.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등을 설치·운영의 근거로 하고 있음.
 - 청년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조례 제16조 제2항)
 - 경상남도 청년센터 사업 계획의 수립과 수행
 - 청년의 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자립, 권익 보호 등을 위한 활동 지원 및 발굴
 - 청년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연구·조사, 민관협력 활성화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동 등
 - 2022년 7월 현재 재단법인 경남연구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음⁴²⁾.

41)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youth.gyeongnam.go.kr) - 네트워크 소개 내용을 참고함.

42) 경남청년센터 홈페이지 - 청년뉴스 내용에서 확인함(youth.gyeongnam.go.kr/youth/board.es?mid=a10501020000&bid=0006&act=view&list_no=2151&tag=&nPage=1&cg_code=).

- 도지사는 청년센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임(조례 제16조 제3항).
- 경남청년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있음⁴³⁾.
 - 시설 내 공유공간은 예약 없이 사용이 가능한 곳과 예약이 필요한 공간으로 구분됨.
 - 공유주방과 공유카페, 공유갤러리(모임방)는 대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공유주방과 공유카페는 문의하여 대관 예약을 할 수 있으나, 모임방은 대관이 불가함.
 - 컴퓨터와 화이트보드 등이 설치된 공유오피스는 예약해야만 이용이 가능함.
 - 모든 공간의 대관 또는 운영시간은 동일함.
 - 평일(월~금요일) 10:00~21:00 및 토요일 10:00~19:00, 일요일과 공휴일은 이용불가
- 경남청년센터는 경상남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14개 청년공간을 소개하고 있음⁴⁴⁾.
 - 모두 무료 이용이 가능한 곳이며, 제공하는 대관시설의 종류와 개수 등은 상이함.
 - 경남청년센터 이외에도 지역별 청년센터(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양산시, 통영군, 함안군)와 관계기관의 부대시설(거제시 청춘다락, 경남콘텐츠코리아랩, 진해도서관, 창원청년비전센터, 청년마음단디센터, 청년일자리프렌즈)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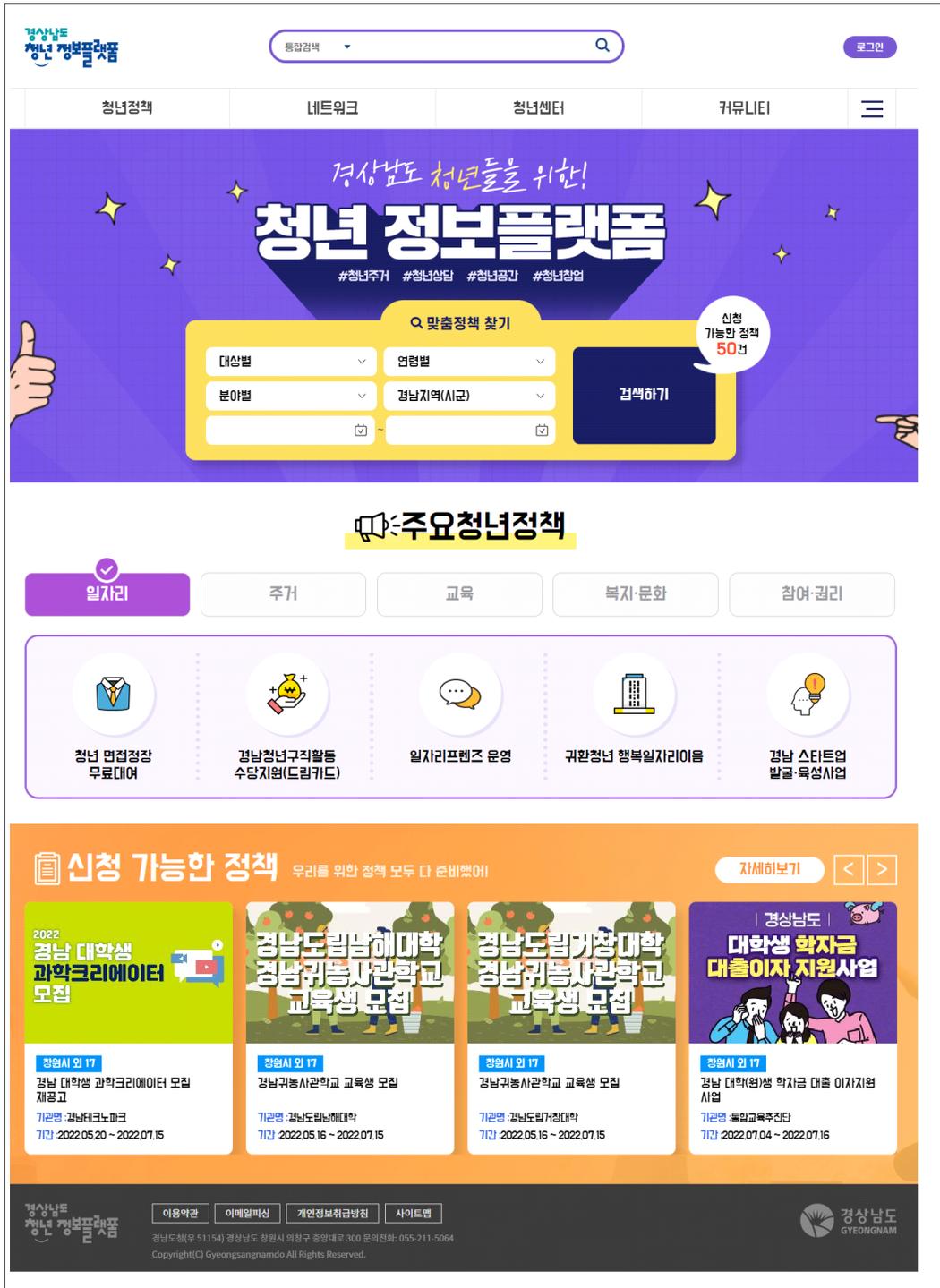
(2) 청년정보플랫폼

- 경상남도는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독려하고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공간으로서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youth.gyeongnam.go.kr/youth)을 운영하고 있음.
 - 신청 가능한 경상남도 청년정책 사업을 대상별·연령별·분야별·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임.
 - 경상남도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센터 등의 소식과 활동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관심 분야 청년멘토와의 맞춤형 상담(48시간 내 답변 제공)도 진행하고 있음.

43) 경남청년센터 홈페이지 - 시설예약(youth.gyeongnam.go.kr/youth/centerAreaList.es?mid=a10604010100)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44) 경남청년센터 홈페이지 - 청년공간소개(youth.gyeongnam.go.kr/youth/youthArea.es?mid=a10508000000&count_list=10&area_code=&price_code=&operation_code=&keyword=&page_no=1)를 참고함.

[그림 3-5]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모습



주: 2022년 7월 1일 기준,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youth.gyeongnam.go.kr/youth)

5. 제주특별자치도

1) 제도

(1) 조례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의 참여와 교류 확대, 자립기반 형성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해당 조례는 2016년 9월 제정됨.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9번째에 해당함.
 - 조례는 목적과 정의, 도지사과 도의회의 의무 등을 다루고 있음.

[표 3-5] 제주도 청년기본조례 주요 내용

- 제1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3조 제1호 청년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으로 정의함.
- 제12조 제6항 도지사는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일정을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구성해야 함.
- 제12조 제5항 도지사는 예산의 일정률을 청년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제12조의 2 제1항 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한 제주청년원탁회의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도지사는 청년의 활동과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조례 제19조 및 제19조의2).
- 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등의 자문기구를 운영하는 과정에 청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조례 제12조 제3항).

- 2020년 4월에는 제주도 청년정책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기금을 마련함.
 - 청년기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용되는 한시적 기금임(조례 제4조).
 - 기금의 재원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그밖에 수입금임(조례 제5조).
 - 기금은 용도는 청년의 능력개발과 창업육성 등 지원,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의 지원,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 등임(조례 제6조).
 -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제주도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조례 제10조).

- 2021년 5월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고립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 등의 목적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함.
 -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의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 중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함(조례 제2조).
 -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조례 제1조 및 제3조).
 - 도지사는 5년마다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함(조례 제5조 및 제6조).
 -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립과 교육·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조례 제8조~제11조),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도 제공할 수 있음(조례 제12조).

(2) 기본계획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조례 제7조).
 - 도지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제7조 제4항).
 -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을 위한 별도 대책을 포함해야 함(조례 제7조 제3항).
 -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조례 제7조 제5항).
- 제주도는 2017년에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할 청년정책의 목표와 실천전략, 주요과제 등을 제시함(제주특별자치도, 2019).
 - 비전은 ‘활기찬 제주 청년, 더 밝은 미래’로 설정함.
 - 목표는 ‘정책주체로서의 청년활동 기반 마련 및 청년의 삶의 질 향상’으로 함.

- 실천전략은 4개 부문(소득, 자립, 참여·활동, 문화·여가)별로 3개씩 12가지를 수립함.
 - (소득 부문) ① 일자리 창출과 다양화, ② 취업 기회 확대, ③ 고용지원체계 강화
 - (자립 부문) ① 인재 양성, ② 생활안정 지원, ③ 주거복지 지원
 - (참여·활동 부문) ① 도정정책에 청년참여 보장, ② 청년단체 지원 활성화, ③ 청년활동 조직화 및 지속성 보장
 - (문화·여가 부문) ① 다양한 문화와 여가 콘텐츠 개발, ② 문화 향유 관련 비용 등 지원, ③ 청년문화 창작자 지원
- 2019년 4월에는 국가정책사업과의 연계, 민선 7기 청년정책의 방향, 2018년도의 사업평가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차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발표함(제주특별자치도, 2019).
 - 비전과 목표 등 정책의 기본 틀은 변화가 없었으나, 세부 과제수와 예산액 등이 변화함.
 - 과제수는 기존 62개에서 46개로 줄어든 반면, 5년간의 예산투입액은 기존 1,515억원 가량에서 약 3,230억원으로 증가함.
- 현행 기본계획에서 청년의 참여와 권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는 10가지임.
 - (공간 지원) ① 청년복합활동센터 운영
 - (활동 지원) ① 청년원탁회의 운영, ② 청년 참여율 향상, ③ 청년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④ 청년연구사업 지원, ⑤ 청년 포럼 개최, ⑥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 (교류 지원) ① 청년 동아리 지원, ② 청년 소통·교류 지원, ③ 청년 플랫폼 운영·홍보

(3) 시행계획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 내용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조례 제8조).
- 2022년 시행계획에서 청년의 참여와 권리 분야 추진과제는 총 20건임(전체 94건). 예산규모는 약 23.6억 원으로 전체 청년정책 예산(582억 원)의 4.06% 수준임(제주특별자치도, 2022)⁴⁵⁾.

45) 2022년 시행계획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분야는 일자리 분야임. 추진과제의 수는 총 34건(전체 94건)이며,

- 추진과제 1은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률을 늘리는 등 제주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임.
 -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수를 확대하고, 청년의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계획함.
- 추진과제 2는 청년원탁회의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정책참여와 민·관 소통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임.
 - 청년의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정책설계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계획함.
- 추진과제 3은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제주도 청년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과 참여·활동 지원 등을 강화하는 것임.
 - 참여위원을 모집하여 제3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년정책 제안 공모와 서귀포 청년데이 운영, 서울시와 연계한 청년정책학교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추진과제 4는 청년에 관한 자율연구 업체를 선정하고 연구를 시행토록 하는 것임.
 - 청년정책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정책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추진과제 5는 2022년도 제주청년통계 조사를 실시하는 것임.
 - 2019년 최초 작성된 제주청년통계의 작성 주기(3년)가 도래함에 따라 통계청 제주사무소와 협의하여 제주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작성할 계획임.
 - 조사 예정인 항목은 인구, 혼인·출산, 주택, 일자리, 재산, 복지, 연금, 건강 등임.
- 추진과제 6은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임.
 - 청년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청년의 의견과 실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의 선정과 시상을 계획함.
- 추진과제 7은 제주청년센터 운영과 자체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것임.
 - 제주도와 수탁기관(제주테크노파크), 청년센터 간의 합동 워크숍 등을 개최할 예정임.
- 추진과제 8은 청년단체 등의 활동을 위한 과업수행비를 지원하는 것임.
 - 청년의 자립과 교류, 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 중인 청년단체들을 육성하고, 청년활동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 4개 단체당 1,250만 원씩의 지원을 계획함.

예산 규모는 약 350.6억원으로 전체 청년정책 예산의 60.2% 수준임. 일자리 분야 다음은 교육 17.5%(102억원), 주거 12.6%(73.4억원), 복지·문화 5.6%(32.5억원), 참여·권리 4.1%(23.6억원) 순임.

- 추진과제 9는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진로를 모색하고 삶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채용기간(gap year)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임.
 - 용역대행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60명 내외 청년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임.
- 추진과제 10은 제주청년등록시스템 운영을 통해 맞춤형 정책 추진을 강화하는 것임.
 - 등록 청년을 대상으로 관심분야별 정보를 제공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려 함.
- 추진과제 11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청년의 교류와 활동을 독려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임.
 -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청년공동체 5팀에게 8만 원씩의 과업수행비를 제공할 계획임.
 - 네 차례의 공동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 예정임.
- 추진과제 12는 청년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임.
 - 제주도 내 청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강좌와 세미나, 통일안보 현장 방문 등 청년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의 추진을 계획함.
- 추진과제 13은 제주도 이주청년을 위한 정착지원 선물과 책자 등을 제공하는 것임.
 - 제주도 청년정책 자료와 선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전입 청년의 정착률을 높이려 함.
- 추진과제 14는 청(靑)코노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주청년의 경제역량을 제고하고 경제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임.
 - 관련 교육 및 실무체험 프로그램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여 청년 50명에게 제공하는 것을 계획함.
- 추진과제 15는 청년 공익활동가 및 단체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청년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에 일익하도록 하기 위함.
- 추진과제 16은 청년을 제주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주도 내·외 청년들의 협업 기회를 늘리고, 청년 유입을 유도하는 것임.
 - 청년 3팀당 활동비 1,200만 원과 자문·네트워킹비 3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을 계획함.
- 추진과제 17은 타 지역 청년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참가실비(항공비, 숙박비, 실비) 등의 지원을 계획함.
- 추진과제 18은 청년반상회 운영을 통해 영역별·분야별 청년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임.

- 주제별 청년반상회를 개최하여 청년 간에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정책개선 사항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함. 연간 3회 운영을 계획함.
- 추진과제 19는 청년포럼 개최를 통해 청년 스스로가 청년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과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임.
 - 청년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포럼을 추진하고, 참가자는 100명 이상을 목표로 함.
- 추진과제 20은 서귀포 관광 시책과 상품 등을 개발·홍보하기 위한 서귀포 청년관광 포럼을 개최하는 것임.
 - 조별 분임활동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서의 검토 후 예산 반영을 추진함.

2) 청년 참여 관련 기구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제주도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의결기구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 2016년 설립 당시에는 ‘청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위원회를 설치함. 정부가 2020년 「청년기본법」을 제정하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규정한 것을 감안하여 제주도도 며칠 뒤 조례를 개정함. 이후 현재까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 중임.
 - 주요 심의·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조례 제10조 제2항).
 -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조례 제10조 제3항).
 - 위원장은 도지사가 맡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함.
 -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국장과 기획·일자리·주택·복지·문화·농축산·4차산업 등에 관한 부서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함(제10조 제4항).
 -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50% 이상은 청년으로 구성해야 함(조례 제10조 제5항)

- 제주도의회 의원, 청년단체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과 관계기관장,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조례 제11조 제1항).
 -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함(조례 제11조 제2항).
 - 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조례 제11조 제3항).
 -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실무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일자리·주택·복지·문화·농축산·4차산업 등에 관한 부서의 장으로 함.
 - 실무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함.
- 각종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제주도 내에서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수행함(조례 제10조 제10항).
-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조례 제9조 제10항), 각종 사무의 처리를 위한 간사는 서울시 내에서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수행함(조례 제9조 제11항).
 - 2022년 7월 기준으로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임⁴⁶⁾.
- 위원회 위원에게는 2년의 임기를 부여하며, 연임은 1회만 가능함(조례 제10조 제7항).
 -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큼을 임기로 함.
-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의 50%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50% 이상이 찬성하여야 의결한 것으로 봄(조례 제10조 제10항).
 -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음.

46)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조직도(www.jeu.go.kr/jeju/jeju/org/organization.htm),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등을 참고함.

(2) 청년원탁회의

- 청년원탁회의는 제주도의 청년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청년의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기구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의2를 근거로 함.
 - 청년원탁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조례 제12조의2 제2항).
 - 청년 의견수렴과 청년정책의 제안, 청년 문제의 발굴·조사와 개선방안 모색
 - 국내·외 청년단체 및 협의체와 교류·협력
 -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도지사는 해당연도 청년원탁회의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함(제12조의2 제3항).
- 청년원탁회의는 매년 50~100명 규모의 청년위원을 구성·운영하고 있음⁴⁷⁾.
 - 위원 임기는 약 1년임. 2016년 개설되어 2022년 현재 6기가 활동 중임.
 - 제1기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55명의 청년위원이 활동함. 5개의 분과(일자리, 공동체, 문화, 참여 및 역량개발, 주거 및 생활안정)로 구성됨. 총 6회의 전체회의와 4회의 청년활동 아카데미, 제주청년포럼 행사 등을 개최함.
 - 제2기는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64명의 청년위원이 활동함. 6개의 분과(교육역량 1, 교육역량2, 일자리, 귀농귀촌, 사회참여, 주거생활) 활동을 수행하며 11건의 정책을 제안함. 총 4회의 전체회의와 제주청년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함. 타 시도와의 교류를 위해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 서울청년주간 등에 방문함.
 - 제3기는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64명의 청년위원이 활동함. 7개 분과(관광, 교육, 농업, 문화예술, 일자리, 주거, 환경)가 10건의 정책을 제안함. 총 4회의 전체회의와 청년의 날 미니포럼 등을 개최함. 타 시도와의 교류를 위해 대구시 청년센터에 방문하고,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과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 등에 참여함.
 - 제4기는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87명의 청년위원이 활동함. 7개 분과(건강, 관광, 교육, 문화, 일자리, 주거, 환경)가 10건의 정책을 제안함. 대구모 감염병 사태(코로나 19)로 인해 타 시도 교류 활동은 하지 못함.

47)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 - 청년원탁회의 소개 내용을 참고함(https://jejuyouth.com/pages.php?p=2_5_1_1)

- 제5기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50명의 청년위원이 활동함. 5개 분과(교육농업, 복지문화, 일자리관광, 주거도시재생, 참여권리환경) 활동을 수행하며 11건의 정책을 제안함. 대규모 감염병 사태(코로나19)로 인해 타 시도 교류 활동은 하지 못함.
- 제6기는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83명의 청년위원이 활동할 예정임. 총 8개의 분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권리, 환경, 관광)로 나누어 운영 중임.

3) 공간

(1) 청년센터(청년다락)

- 제주청년센터는 제주도 청년정책을 발굴·연구하고 추진하며, 청년의 소통과 교류 활동, 일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간지원조직임.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 등을 설치·운영의 근거로 하고 있음.
 - 청년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조례 제19조 제2항).
 - 제주도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과 수행
 - 청년의 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 자립, 권익과 건강 보호·증진 등을 위한 활동 지원
 - 국내·외 청년네트워크의 구축과 교류, 민관협력 활성화 등
 - 도내 청년단체의 발굴과 활동 지원, 청년공간의 마련과 운영
 - 청년정책 연구와 조사 등
 - 현재 제주청년센터는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가 위탁운영하고 있음. 업무담당 부서는 지역산업육성실 제주청년센터운영TF임⁴⁸⁾.
 - 도지사는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임(조례 제19조 제3항).
- 제주청년센터에서는 ‘제주청년다락’이란 이름으로 다음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⁴⁹⁾.
 - 2022년 7월 현재 청년다락은 제주도 내 5개소가 설치·운영 중임.
 - 본점과 분점 1·4호점은 제주시에 위치해 있고, 분점 2·3호점은 서귀포시에 위치함.
 - 각 청년다락의 규모가 상이하여 제공하는 대관시설의 종류와 개수에 차이가 있음.

48)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부서 소개 글(www.jejuip.or.kr/center/local)을 참고함.

49)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 - 공간예약(jejuyouth.com/pages.php?p=4_3_1_1) 내용을 검토하여 작성함.

- 개인 독서나 공부, 휴식 등이 가능한 공간(오픈라운지)을 1개 이상씩 보유하고 있으며, 소규모 모임과 회의를 위한 공간(회의실)도 최소 1개씩은 갖추고 있음.
 - 대관은 평일(월~금요일) 기준 10:00~21:00(본점과 분점 1호점은 22:00까지)이고, 토요일은 10:00~17:00(분점 1호점은 일요일도 10:00~17:00 운영) 동안 가능함. 분점 1호점을 제외한 나머지 곳들은 일요일과 공휴일 모두 휴관하여 대관이 불가함.
- 제주청년센터에서는 청년의 노무·주거 등의 권리 교육과 취업활동, 취미·여가생활, 정신건강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⁵⁰⁾.

(2) 청년회관

- 제주청년회관은 제주청년센터의 소식을 비롯하여 청년에 관한 정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제주시 청년친화업체(장소)를 일컬음⁵¹⁾.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의2 등을 설치·운영의 근거로 하고 있음.
 - 도지사는 청년 활동의 지원과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청년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해 운영할 수 있음(조례 제3조 제5호 및 제19조의2 제2항).
 - 도지사는 청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조례 제19조의2 제3항 및 제4항).
- 장소별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 복합문화공간, 커피숍,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기타로 분류됨.
 - 2022년 7월 현재 청년회관은 제주도 내 41개소가 분포해 있음.
 - 제주시에 36개소, 서귀포시에 5개소가 위치해 있음.
 - 공공기관 13개소(제주청년센터와 제주청년다락 포함), 복합문화공간 11개소, 커피숍 10개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4개소, 기타 3개소(식당, 맞춤형장소 등)임.

(3) 청년센터 홈페이지

- 제주도는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홍보·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공간으로서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jejuyouth.com)를 운영하고 있음.

50)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 - 사업신청(jejuyouth.com/pages.php?p=4_2_0_1) 내용을 검토하여 작성함.

51)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 - 제주청년회관(jejuyouth.com/pages.php?p=3_2_1_1#Maps) 내용을 참고함.

- 신청 가능한 제주도의 청년정책 사업과 정책활동 결과물, 제주청년센터가 주최한 교육·세미나 영상 등을 게시하고 있음.
-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제주도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청년들이 자신의 인적사항, 관심분야, 청년활동 경력과 희망분야 등을 등록하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등록시스템(청년DB)도 갖추고 있음.

[그림 3-6]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 모습



주: 2022년 7월 8일 기준,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jejuyouth.com)

6. 소결

- 청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정치·경제·사회 등 각종 부문에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의 명문화 수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음.
 - 인천시는 청년을 주저어로 한 2개의 조례가 제정됨. 서울시, 광주시, 경상남도, 제주도는 청년을 위한 공간과 시설,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
 - 정책대상 청년의 범위는 대체로 거주지역의 만 19~39세 주민임. 사례조사 대상 중에서는 경남만이 만 19~34세로 정의함.
- 청년정책 시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에 관한 추진과제는 전체 과제의 15% 수준임. 전체 청년정책예산 중에서는 약 5% 미만이 청년의 참여부문에 할당되고 있음.
 -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기준으로, 인천시는 8.8%가 청년의 참여부문 과제임. 비교군인 서울시(14.6%), 광주시(11.9%), 경상남도(13.7%), 제주도(21.3%)에 비해 낮은 편임.
 - 인천시는 2022년 청년정책예산 중에서 2.7%를 청년의 참여부문 예산으로 배정함. 비교군인 서울시(1.6%), 광주시(2.2%)보다는 많고 경상남도(6.5%), 제주도(4.1%)보다는 적음.
- 청년의 소통과 교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오프라인 공간으로는 청년센터가 중심점이 되고 있음. 온라인 공간은 지역별 청년정책 소개·홍보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 오프라인 공간은 기본적으로 개인 공부와 독서, 휴식을 위한 개방형 공간과 함께 소규모 모임 및 회의를 위한 비개방형 공간을 1개 이상씩 갖추고 있음.
 - 오프라인 공간의 대관은 대체로 평일과 토요일에만 가능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해당 시설이 휴관하여 이용이 불가함.
 - 평일(월~금요일)은 대체로 10:00~21:00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토요일은 17:00까지만 운영하고 있음.
 - 인천은 월요일을 휴관하는 청년센터마루 동구가 토요일에도 22:00까지 운영함.
 - 비교군 중에서는 서울의 청년센터, 청년허브, 무중력지대의 일부 지점만 토요일에도 최대 22:00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불가함. 제주의 청년다락 분점 1호점은 토요일에 17:00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나, 일요일에도 17:00까지 운영함.

-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0~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음.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인천시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시장을 임명하고 있음. 서울시, 광주시, 경상남도, 제주도는 단체장뿐만 아니라 위촉위원 중에 호선한 자도 공동 위원장으로 두고 있음.
 - 조례상 정기회의 개최 횟수로 인천과 경남은 연 1회를 명시하고 있음. 이와 달리 서울, 제주는 연 2회, 광주는 연 3회 이상의 회의 개최를 규정하고 있음.
-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네트워크는 지역별로 명칭과 참여위원의 수, 분과 운영방식 등이 상이함.
 - 사례조사 대상 중에서 서울과 경남은 청년정책네트워크, 인천은 청년네트워크, 광주는 청년위원회, 제주는 청년원탁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네트워크 참여위원의 수는 최소 50명(광주)에서 최대 1,000명(인천)으로 다양함.
 - 경남은 2022년 현재 250명 내외의 위원수를 구성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1,200명을 모집하여 활동을 전개한 바 있음. 인천이 목표로 하고 있는 1,000명의 위원 운영을 해 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그 당시 경남은 참여위원을 오프라인(250명) 참여와 온라인(950명) 참여로 나누어서 운영함. 핵심 참여인력으로 250명만이 16개 분과에서 토론과 속의 활동에 참여하였음. 현재 인천시가 오프라인 위원 1,000명을 모집하여 운영 중인 것과 차이가 있음.
 - 위원의 임기는 사례조사 대상 중에서 인천만 2년이고, 서울·광주·경남·제주는 1년임.
 - 분과의 수는 광주 4개, 인천 5개, 서울 6개, 제주 8개, 경남 16개의 순으로 많음.
 - 분과당 참여위원의 수를 산출해 본다면, 광주·경남·제주는 약 13~16명 정도임. 이에 비해 서울은 약 83명, 인천은 200명 규모로, 긴밀한 교류·활동을 하기 어려워 보임.

[표 3-6] 청년 참여제도 사례 종합

구분	서울	인천	광주	경남	제주		
제도	청년 조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기본 • 청년창업 지원 • 청년공간 설치 운영 • 청년참여 활성화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 청년 주거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 청년 예술인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기본 • 청년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기본 • 청년창업 지원 • 청년기업 육성 지원 •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 청년일자리 창출 • 청년 프리랜서 지원 • 청년 예술인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기본 • 청년창업 지원 • 청년시설 운영 지원 • 청년농어업인 육성 •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 청년 주거 지원 • 청년 생활안정 지원 • 청년 문화예술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기본 • 청년농업인 육성 •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 청년 문화예술 육성 지원 • 청년활동 지원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 청년기금 설치 운영 • 청년대상 	
	청년의 범위	만 19-39세	만 19-39세	만 19-39세	만 19-34세	만 19-39세	
	비전	다시 뛰는 서울, 기승 뛰는 청년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시민 중심도시 광주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활기찬 제주 청년, 더 밝은 미래	
	추진과제수	48건	80건	84건	117건	94건	
	참여 부문	7건 (14.6%)	7건 (8.8%)	10건 (11.9%)	16건 (13.7%)	20건 (21.3%)	
	청년예산 규모	9,282억원	891억원	871억원	1,182억원	582억원	
	참여 부문	145억원 (1.6%)	24억원 (2.7%)	19억원 (2.2%)	77억원 (6.5%)	24억원 (4.1%)	
담당 조직	행정(1)부시장 보좌기구 미래청년기획단	일자리경제본부 청년정책과	행정부시장 보좌기구 청년정책관	도지사 보좌기구 청년정책추진단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공간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센터(오랑) • 청년활동지원센터 • 청년허브 • 무중력지대 • 청년교류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센터마루 • 청년복합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센터(청년다락) • 청년회관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센터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보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센터 홈페이지 	
정책 조정 위원회	인적 구성	위원수	20명 이내 (위원장 2, 부위원장 1)	20명 이내 (위원장 1, 부위원장 1)	25명 이내 (위원장 2, 부위원장 1)	20명 이내 (위원장 2, 부위원장 1)	30명 이내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 위촉위원 중 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 위촉위원 중 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 • 위촉위원 중 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 • 위촉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위원 중 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중 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중 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중 호선
	정기회의 운영	연 2회	연 1회	연 3회 이상	연 1회	연 2회	
네트 워크	네트워크 명칭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네트워크	청년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원탁회의	
	위원수	500명 이하	1,000명	50명 이내	250명 내외	100명 내외	
	위원장	남·녀 1명씩 선출	(대외적 확인 불가)	1명 호선	(대외적 확인 불가)	(대외적 확인 불가)	
	부위원장	(대외적 확인 불가)	(대외적 확인 불가)	남·녀 1명씩 호선	(대외적 확인 불가)	(대외적 확인 불가)	
	위원 임기	1년	2년	1년	1년	1년	
	분과수	6개	5개	4개	16개	8개	
위원수/분과수	83.3명	200명	12.5명	15.6명	12.5명		

주: 2022년 7월 조사 기준임.

인천시 청년 참여 현황분석



인천시 청년 참여 현황분석

1. 분석 개요

- 청년의 참여 현황 및 참여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분석, 면접조사, 행정자료 분석 등을 실시함.
 - 인천시 청년의 참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통계 분석함.
 -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함.
 - 인천시 청년 참여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천시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면접조사를 통해 참여제도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며 운영상의 개선점을 확인함.
 - 인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함.

(1) 청년 참여실태 분석

- 청년의 참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사회분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함.
 -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전 지역의 19세 이상을 모집단으로 1년 단위로 실시함. 조사를 위한 표본집단은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확률비례 추출함. 조사대상은 19세 이상 69세 이하 가구원 8,000명임.
 -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인천시 청년의 참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된 1차 자료는 아님. 인천시 청년의 정치·사회·정책참여의 현황분석을 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분석자료로 활용함.
 -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정치·사회·정책참여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분석이 가능한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음.

-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4년간의 조사 내용을 분석함.

[표 4-1] 사회통합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명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지역	전국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 69세 이하 가구원, 8,000명
표본추출방법	다단계화 확률비례(계통)추출(각각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통계청 자료 기준)
조사기간	2018, 2019, 2020, 2021년 9월~10월 (각각 61일간)
조사방법	가구방문 면접조사

-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항목으로는 삶의 수준·권리와 만족도, 사회 및 정치참여, 소통과 신뢰, 공정성, 거버넌스, 사회적 포용 등이 있음.
 -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정치참여, 사회참여, 정책참여 등임. 청년의 참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특·광역시 청년의 참여 현황과 인천시민의 연령별 참여 현황을 분석함.
 - 특·광역시 청년별, 인천시 연령별 참여 현황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활용함
 - 정치참여는 선거 참여, 정치 및 사회 쟁점에 대한 온라인·의견 제시와 관련된 사항, 정당 참여 등의 항목을 활용하여 조사함.
 - 사회참여는 노동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동창회 등 사회단체 참여에 대한 항목으로 측정함.
 - 정책참여는 공청회·청문회 참여, 주민참여예산 참여에 대한 항목으로 분석함.

[표 4-2] 조사 내용

구분		내용
조사 내용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수준, 권리, 만족도 • 사회 및 정치참여 • 소통과 신뢰 • 공정성 • 거버넌스 • 사회적 포용 • 개인에 대한 사항
	분석 활용 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 대한 사항: 거주지역, 연령, 성별 등 •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 • 정치참여: 선거 참여, 정치 및 사회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온라인, 탄원서, 시위참가 등) • 사회참여: 노동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동창회 등 사회단체 참여 • 정책참여: 공청회/청문회 참여, 주민참여예산 등; 인천시 위원회 (연령별)구성 현황(인천시 내부자료 활용)

(2) 인천시 참여제도 운영 현황분석

○ 정책참여에 대한 현황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통계자료와 인천시 청년의 위원회 참여와 청년위원회의 참여자 면접조사로 청년의 정책참여에 대한 분석을 보완함⁵²⁾.

- 먼저, 참여제도의 운영 빈도나 참여 정도의 분석을 위한 자료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연령별 참여 비율을 분석함.
 -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 위원회 등의 참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은 제도의 운영 빈도가 낮아 청년들의 정책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둘째, 청년들의 참여에 대한 현황분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인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 등 청년참여제도에 관여 및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52) 정책참여는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 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가 있음. 사회통합실태조사에는 주민소환이나 주민발안, 주민투표, 위원회 등에 대한 항목은 없어서 활용하지 못함. 청년들의 정책참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연령별)에 대한 통계자료를 활용함.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은 자주 운영되는 참여제도가 아니므로 청년들의 참여행태의 조사를 통계자료로 분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인천시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참여제도임.
- 면접조사는 위원회와 네트워크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4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함.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위원회에 위원 또는 위원장으로 참여하거나 네트워크의 참여·관리분과장 등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위원으로 위촉된 인천청년은 8명이고, 청년네트워크는 50명(2기), 1,000명(3기 위원 위촉 목표)임.
- 면접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청년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청년공간 이용현황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청년 정책참여제도에 참여하게 된 동기 등임.
- 면접조사는 2022년 7월 11일부터 13일(3일간) 동안 실시하였으면, 면접조사는 1시간 정도로 진행함.

[표 4-3] 면접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인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인천시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시 청년 4명
조사방법	(반구조화된 설문문항을 통한) 면접조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인천시 청년네트워크 운영 현황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인천시 청년공간 이용 현황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인천시 청년 정책참여제도 참여 동기 및 개인에 관한 사항
조사기간	• 2022년 7월 11일 ~ 13일(3일간)

2. 청년의 참여 현황분석

1) 사회통합실태조사 분석

(1) 응답자 일반현황

- 인천시 청년의 참여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함. 인천시 청년의 참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특·광역시 청년들의 참여 현황과 인천시민의 참여 현황을 분석함.
- 사회통합실태조사에 참여한 특·광역시 청년은 2018년 1,283명, 2019년 1,404명, 2020년 1,223명, 2021년 1,151명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49.5~51.3%, 여성이 48.7~50.5%이며, 2020년을 제외하고 여성의 참여 비율이 조금 높음.
 - 2018년: 남성 635명(49.5%), 여성 648명(50.5%)
 - 2019년: 남성 695명(49.5%), 여성 709명(50.5%)
 - 2020년: 남성 627명(51.3%), 여성 596명(48.7%)
 - 2021년: 남성 573명(49.8%), 여성 578명(50.2%)
 -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9세가 48.6~52.5%이며, 30~39세가 47.5~51.4% 정도가 참여함. 2021년을 제외하고 19~29세의 참여비율이 30~39세보다 높음.
 - 2018년: 19~29세 624명(48.6%), 30~39세 659명(51.4%)
 - 2019년: 19~29세 722명(51.4%), 30~39세 682명(48.6%)
 - 2020년: 19~29세 642명(52.5%), 30~39세 581명(47.5%)
 - 2021년: 19~29세 595명(51.7%), 30~39세 556명(48.3%)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청년이 25.3~29.2%로 가장 많이 참여함. 부산시(12.9~15.4%), 인천시(13.0~15.2%), 대구시(12.0~13.4%), 대전시(10.0~13.6%), 광주시(10.4~11.0%), 울산시(9.0~9.1%) 순으로 참여자 수가 많음.
 - 2018년: 서울시(25.3%), 부산시(15.4%), 대전시(13.6%), 대구시(13.4%), 인천시(13.0%), 광주시(10.4%), 울산시(9.0%) 순임.

- 2019년: 서울시(28.6%), 인천시(15.2%), 부산시(13.9%), 대구시(12.3%), 광주시(11.0%), 대전시(10.0%), 울산시(9.0%) 순임.
- 2020년: 서울시(28.8%), 부산시(15.0%), 인천시(13.4%), 대구시(12.0%), 광주시(10.7%), 대전시(10.6%), 울산시(9.0%) 순임.
- 2021년: 서울시(29.2%), 인천시(14.8%), 부산시(12.9%), 대구시(12.3%), 대전시(11.3%), 광주시(10.5%), 울산시(9.1%) 순임.

[표 4-4] 응답자 현황: 특·광역시 청년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성별	남성	635	49.5	695	49.5	627	51.3	573	49.8
	여성	648	50.5	709	50.5	596	48.7	578	50.2
연령	19~29세	624	48.6	722	51.4	642	52.5	595	51.7
	30~39세	659	51.4	682	48.6	581	47.5	556	48.3
지역	서울시	324	25.3	402	28.6	352	28.8	336	29.2
	부산시	197	15.4	195	13.9	183	15.0	148	12.9
	대구시	172	13.4	173	12.3	147	12.0	141	12.3
	인천시	167	13.0	213	15.2	171	13.4	170	14.8
	광주시	133	10.4	155	11.0	131	10.7	121	10.5
	대전시	174	13.6	140	10.0	129	10.6	130	11.3
	울산시	116	9.0	126	9.0	110	9.0	105	9.1
계	1,283	100.0	1,404	100.0	1,223	100.0	1,151	100.0	

○ 사회통합실태조사에 참여한 인천시민의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517명, 2019년에는 522명, 2020년에는 504명, 2021년에는 506명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46.6~50.4%, 여성이 49.6~53.4%임. 연령별 참여비율을 보면 50~59세(20.6~27.9%), 40~49세(17.4~23.4%), 60~69세(14.2~26.0%), 30~39세(16.5~20.3%), 19~29세(15.5~20.5%) 순으로 참여비율이 높음.

- 2018년: 남성 257명, 여성 260명; 50~59세(144명), 40~49세(120명), 30~39세(87명), 60~69세(86명), 19~29세(80명) 순임.

- 2019년: 남성 260명, 여성 262명; 40~49세(122명), 50~59세(113명), 19~29세(107명), 30~39세(106명), 60~69세(74명) 순임.
- 2020년: 남성 254명, 여성 250명; 60~69세(131명), 50~59세(104명), 40~59세(98명), 19~29세(88명), 30~39세(83명) 순임.
- 2021년: 남성 236명, 여성 270명; 50~59세(126명), 60~69세(122명), 30~39세(89명), 40~49세(88명), 19~29세(81명) 순임.

[표 4-5] 응답자 현황: 인천시민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성별	남성	257	49.7	260	49.8	254	50.4	236	46.6
	여성	260	50.3	262	50.2	250	49.6	270	53.4
연령	19~29세	80	15.5	107	20.5	88	17.5	81	16.0
	30~39세	87	16.8	106	20.3	83	16.5	89	17.6
	40~49세	120	23.2	122	23.4	98	19.4	88	17.4
	50~59세	144	27.9	113	21.7	104	20.6	126	24.9
	60~69세	86	16.6	74	14.2	131	26.0	122	24.1
계		517	100.0	522	100.0	504	100.0	506	100.0

(2) 지역소속감

- 청년의 지역참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참여와 관련된 조사항목인 지역소속감(나는 현재 살고 있는 시·도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을 분석함.
 - 지역참여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있음(Talo, Mannarini, & Rochira, 2014). 소속감이 있는 사람은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에 대한 동기요인을 갖기 때문임.
- 2018~2021년 조사결과 인천시 청년의 지역소속감은 2.63~2.78점(최대값 4점 기준)으로 조사됨. 2019년을 제외하고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조사를 보면, 인천시는 2.64점으로 6번째로 조사됨. 울산시(2.90점)와 부산시(2.86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며, 광주시(2.32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조사에서는 인천시는 2.76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광주시가 2.8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시가 2.6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2020년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시는 2.78점으로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서울시와 부산시가 2.9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시가 2.54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조사에서는 인천시는 2.63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와 부산시 청년의 지역소속감(각각 3.18점 3.16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6] 특·광역시 청년의 지역소속감

(단위: 명, 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참여자 수	평균	표준 편차									
서울시	324	2.69	0.71	402	2.69	0.80	352	2.90	0.73	336	3.18	0.70
부산시	197	2.86	0.74	195	2.68	0.68	183	2.90	0.75	148	3.16	0.71
대구시	172	2.80	0.62	173	2.68	0.71	147	2.54	0.77	141	2.70	0.79
인천시	167	2.64	0.66	213	2.76	0.67	171	2.78	0.82	170	2.63	0.68
광주시	133	2.32	0.73	155	2.82	0.52	131	2.79	0.66	121	2.91	0.71
대전시	174	2.78	0.65	140	2.72	0.70	129	2.84	0.54	130	2.81	0.61
울산시	116	2.90	0.75	126	2.60	0.68	110	2.76	0.73	105	3.06	0.70
계	1,283	2.71	0.71	1,404	2.71	0.71	1,223	2.81	0.73	1,151	2.95	0.73

주: 최소값은 1, 최대값은 4이며, 4점에 가까울수록 지역소속감이 높음. 분산분석 결과 2018년, 2020년 2021년은 지역별로 청년의 지역소속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2018년 F값=10.90, p<.001, 2020년 F값=4.77, p<.01, 2021년 F값=18.60, p<.001이며), 2019년은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인천시민의 연령별 지역소속감을 확인해 보면, 타 연령대와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30~39세의 지역소속감(2.56~2.74점)이 가장 낮았으며, 19~29세(2.68~2.82점)가 그다음으로 조사됨.
- 60~69세는 2.88~3.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40~49세(2.84~3.05점), 50~59세(2.83~3.03점), 19~29세(2.68~2.82점), 30~39세(2.60~2.74점) 순임.

[표 4-7] 인천시 연령별 지역소속감

(단위: 명, 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참여자 수	평균	표준 편차									
인천시	517	2.87	0.69	522	2.81	0.65	504	3.00	0.81	506	2.77	0.70
19~29세	80	2.68	0.63	107	2.80	0.62	88	2.82	0.88	81	2.70	0.66
30~39세	87	2.60	0.69	106	2.72	0.71	83	2.74	0.77	89	2.56	0.69
40~49세	120	2.93	0.68	122	2.84	0.69	98	3.05	0.72	88	2.64	0.68
50~59세	144	3.03	0.66	113	2.83	0.61	104	2.98	0.78	126	2.82	0.65
60~69세	86	2.99	0.68	74	2.88	0.57	131	3.28	0.80	122	3.02	0.72

주: 최소값은 1, 최대값은 4이며, 4점에 가까울수록 지역소속감이 높음. 분산분석 결과 2018년, 2020년, 2021년은 연령별 지역소속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2018년 F값=8.26, p<.001), 2020년 F값=7.57, p<.001, 2021년 F값=7.28, p<0.001).

(3) 정치참여

-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선거 및 정치 활동 참여에 대한 설문 문항으로 청년들의 정치참여 수준을 조사함.
 - 정치참여는 협의의 정치참여로서 선거 참여, 정당 참여와 광의의 정치참여로서 정치 현안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등 방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선거참여

- 선거참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음: ①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투표로 참여하셨습니다?”, ② “2017년 5월 제19회 대통령 선거에 투표로 참여하셨습니다?”, ③ “2016년 4월 또는 2020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로 참여하셨습니다?”
 - 정치참여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의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측정함. 2018년 자료는 0.750(특·광역시), 0.731(인천시), 2019년은 0.812(특·광역시), 0.756(인천시), 2020년은 0.760(특·광역시), 0.676(인천시), 2021년은 0.750(특·광역시), 0.678(인천시)로 측정됨⁵³⁾.

53) 변수들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 Alpha 값은 0.6 이상에서 수용가능함(DeHart-Davis, 2009).

- 세 문항은 모두 참여와 불참여로 구분되는 2점 척도임. 선거 참여와 관련된 세 항목으로 정치참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표(① 세 문항을 더함, ② 더한 값을 3으로 나눔, ③ 10을 곱함, ④ 0~10점)를 구성함. 10에 가까울수록 정치참여 정도가 높은 것임.
- 청년의 정치참여 측정을 위해 구성한 지표로 확인한 결과 2018년과 2020년 조사에서 서울시가 8.20점, 8.41점, 2019년과 2021년은 광주시가 7.89점, 7.93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선거 참여로 살펴본 인천시 청년의 정치참여는 특·광역시 중 4~7번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2018년도에서는 서울시, 광주시(7.37점), 대전시(7.05점), 인천시(6.99점), 대구시(6.82점), 부산시(6.36점), 울산시(6.01점)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조사에서는 광주시, 서울시(7.47점), 대구시(7.42점), 부산시(7.33점), 울산시(7.30점), 대전시(6.57점), 인천시(6.43점) 순으로 조사됨.
 - 2020년 조사에서는 서울시, 광주시(8.19점), 부산시(7.63점), 대전시(7.34점), 인천시(7.08점), 대구시(5.76점), 울산시(5.36점) 순임.
 - 2021년 조사결과를 보면, 광주시(7.93점), 울산시(7.08점), 서울시(6.88점), 대구시(6.22점), 인천시(6.08점), 대전시(5.87점), 부산시(5.50점) 순임.

[표 4-8] 특·광역시 청년의 정치참여: 선거

(단위: 명, 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참여자 수	평균	표준 편차									
서울시	324	8.20	2.94	402	7.47	3.55	352	8.41	2.76	336	6.88	3.70
부산시	197	6.36	3.93	195	7.33	3.72	183	7.63	3.51	148	5.50	4.00
대구시	172	6.82	3.57	173	7.42	3.96	147	5.76	4.16	141	6.22	4.14
인천시	167	6.99	3.78	213	6.43	3.91	171	7.08	3.42	170	6.08	3.63
광주시	133	7.37	3.63	155	7.89	3.50	131	8.19	3.10	121	7.93	3.50
대전시	174	7.05	3.86	140	6.57	4.06	129	7.34	3.74	130	5.87	4.21
울산시	116	6.01	3.81	126	7.30	3.76	110	5.36	4.24	105	7.08	3.48
계	1,283	7.13	3.63	1,404	7.23	3.77	1,223	7.38	3.59	1,151	6.52	3.86

주: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이며, 10점에 가까울수록 정치참여가 높음. 2018년, 2020년, 2021년은 분산분석 결과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8년 F값=8.66, p<.001, 2019년 F값=3.52, p<.01, 2020년 F값=18.57, p<.001, 2021년 F값=6.61, p<.001).

- 인천시민의 연령별 선거 참여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9~29세 청년들의 정치참여는 4.73~6.07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편임.
 - 19~29세의 선거 참여는 최대 3.68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30~39세의 참여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타 연령대와 0.5~1.5점 정도 차이).
 - 60~69세(9.05~9.50점), 50~59세(8.58~9.28점), 40~49세(7.73~8.94점), 30~39세(7.55~8.39점), 19~29세 순으로 조사됨.

[표 4-9] 인천시 연령별 정치참여: 선거

(단위: 명, 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참여자 수	평균	표준 편차									
인천시	517	8.24	3.03	522	7.57	3.44	504	8.59	2.87	506	7.52	3.32
19~29세	80	5.50	3.97	107	5.33	4.17	88	6.07	3.96	81	4.73	3.64
30~39세	87	8.35	2.87	106	7.55	3.30	83	8.39	2.94	89	7.30	3.17
40~49세	120	8.06	2.18	122	7.73	3.33	98	8.94	2.44	88	8.03	2.80
50~59세	144	9.28	1.94	113	8.58	2.59	104	9.18	2.16	126	8.41	2.82
60~69세	86	9.19	2.17	74	9.05	1.95	131	9.50	1.73	122	8.25	3.04

주: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이며, 10점에 가까울수록 정치참여가 높음. 분산분석 결과 2018년, 2020년, 2021년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8년 F값=27.52, p<.001, 2019년 F값=19.83, p<.001, 2020년 F값=30.04, p<.001, 2021년 F값=21.72, p<.001)

❖ 정당참여

- 정당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항목을 활용하여 청년의 정당참여 정도를 확인함. 특·광역시 청년과 비교하여 인천시 청년의 정당 참여 정도는 낮은 편(2018~2020년 1.042~1.064점, 5~6번째, 2021년 1.421점, 2번째)으로 조사됨.
 - 2018년에는 대전시(1.115점) 청년의 정당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구시 청년은 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2019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울산시(1.310점)와 서울시(1.264점) 청년의 정당 참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대구시(1.029점) 청년의 정당 참여가 가장 낮음.
 - 2020년 조사에서는 울산시(1.318점) 청년의 정당 참여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시(1.039점) 청년의 정당 참여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2021년 조사 결과 광주시 청년의 정당 참여가 2.2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시 (1.412점), 서울시, 대구시 부산시 대전시 울산시 순으로 조사됨.

[표 4-10] 특·광역시 청년의 정치참여: 정당 활동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참여자수	정당참여 정도		
		참여정도	표준편차	
2018	서울시	324	1.040	0.239
	부산시	197	1.051	0.346
	대구시	172	1.000	0.000
	인천시	167	1.042	0.298
	광주시	133	1.083	0.409
	대전시	174	1.115	0.503
	울산시	116	1.026	0.207
	계	1,283	1.050	0.317
2019	서울시	402	1.264	0.663
	부산시	195	1.046	0.341
	대구시	173	1.029	0.251
	인천시	213	1.047	0.304
	광주시	155	1.123	0.539
	대전시	140	1.093	0.493
	울산시	126	1.310	0.753
	계	1,404	1.143	0.530
2020	서울시	352	1.136	0.588
	부산시	183	1.082	0.455
	대구시	147	1.068	0.492
	인천시	171	1.064	0.449
	광주시	131	1.046	0.325
	대전시	129	1.039	0.262
	울산시	110	1.318	0.834
	계	1,223	1.106	0.523
2021	서울시	336	1.273	0.830
	부산시	148	1.176	0.657
	대구시	141	1.220	0.803
	인천시	170	1.412	0.888
	광주시	121	2.289	1.363
	대전시	130	1.123	0.597
	울산시	105	1.105	0.479
	계	1,151	1.349	0.904

주: 소속 및 활동 정도를 묻는 항목으로 5점 척도(1=소속된 적이 없다. 2=과거에 소속된 적은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3=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한다. 4=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5=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항목임. 5점에 가까울수록 참여 정도가 높고, 1점에 가까울수록 참여 정도가 낮음.; 평균은 특·광역시 평균 수치임. 분산분석결과 2018년, 2019년 2021년은 지역별 정치참여 현황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2018년 F값=2.36, p<.001, 2019년 F값=9.73, p<.001, 2021년 F값=30.41, p<.001).

- 정당 참여를 통해 연령별 인천시 정치참여 정도를 확인함. 인천시 청년의 정당 참여 정도는 1.019~1.333점(19~29세), 1.000~1.483점(30~39세)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18~2021년 조사결과를 보면, 40~49세의 정당 참여 정도가 1.092~1.39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음. 60~69세(1.038~1.975점), 50~59세(1.076~1.405점), 19~29세, 30~39세 순으로 조사됨.

[표 4-11] 인천시 연령별 정치참여: 정당 활동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참여자수	정당참여	
			참여정도	표준편차
2018	인천시	517	1.099	0.440
	19~29세	80	1.038	0.249
	30~39세	87	1.046	0.338
	40~49세	120	1.183	0.565
	50~59세	144	1.076	0.356
	60~69세	86	1.128	0.570
2019	인천시	522	1.190	0.670
	19~29세	107	1.019	0.193
	30~39세	106	1.075	0.383
	40~49세	122	1.287	0.886
	50~59세	113	1.301	0.823
	60~69세	74	1.270	0.708
2020	인천시	504	1.073	0.477
	19~29세	88	1.125	0.622
	30~39세	83	1.000	0.000
	40~49세	98	1.092	0.576
	50~59세	104	1.115	0.545
	60~69세	131	1.038	0.360
2021	인천시	506	1.543	0.866
	19~29세	81	1.333	0.906
	30~39세	89	1.483	0.878
	40~49세	88	1.398	0.922
	50~59세	126	1.405	1.339
	60~69세	122	1.975	1.047

주: 소속 및 활동 정도를 묻는 항목으로 5점 척도(1=소속된 적이 없다. 2=과거에 소속된 적은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3=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한다. 4=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5=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항목임. 5점에 가까울수록 정당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정도가 높고, 1에 가까울수록 낮음. 분산분석 결과 2018년, 2019년 2021년은 정치참여 현황이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8년 F값=2.01, p<0.1, 2019년 F값=4.30, p<.01, 2021년 F값=7.42, p<.001).

❖ 정치참여 일반: 정치현안 참여 및 활동

- 청년들의 정치참여 수준 분석을 위해 실태조사의 정치나 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묻는 설문 문항을 활용함.
 -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음: 정치 및 사회 현안에 대해 ①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②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하기”, ③ “서명운동 참여하기”, ④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직접 제출하기, ⑤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⑥ 불매운동 참여하기
 - 여섯 가지 항목은 모두 2점 척도(1=참여, 0=불참)임. 정치참여를 측정하는 변수들의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nbach Alpha값을 확인함. 2018년 0.864(특·광역시 청년), 0.862(인천시), 2019년 0.814(특·광역시 청년), 0.872(인천시), 2020년 0.895(특·광역시 청년), 0.893(인천시), 2021년 0.923(특·광역시 청년), 0.876(인천시)으로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이 수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여섯 가지 문항으로 정치참여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① 여섯 가지 항목(최근 1년 내 참여=1, 참여하지 않음=0)을 합함, ② 6으로 나눔, ③ 10을 곱함, ④ 0~10점)를 구성함.
 - 10에 가까울수록 정치참여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 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정치참여에 대한 조사에서는 인천시 청년의 참여도가 1~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정치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한 지표의 점수로 측정한 결과 2018년(0.76점)과 2019년(2.04점), 2021년(2.03점)에는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2.02점)에는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018년에는 대전시(0.79점), 서울시(0.78점), 인천시, 부산시(0.69점), 광주시(0.64점), 대구시(0.29점), 울산시(0.13점) 순임.
 - 2019년 조사에서는 대전시(2.31점), 부산시(2.23점), 인천시, 서울시(1.75점), 울산시(1.68점), 대구시(1.49점), 광주시(1.13점)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조사결과 인천시, 부산시(1.93점), 서울시(1.83점), 울산시(1.73점), 광주시(1.22점), 대전시(1.02점), 대구시(0.42점) 순으로 조사됨.

- 2021년 조사에서는 부산시(2.55점), 서울시(2.25점), 인천시, 울산시(1.62점), 광주 시(1.03점), 대구시(0.99점), 대전시(0.92점) 순임.

[표 4-12] 특·광역시 청년들의 정치참여: 일반

(단위: 명, 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참여자 수	평균	표준 편차									
서울시	324	0.78	1.73	402	1.75	2.23	352	1.83	2.64	336	2.25	3.64
부산시	197	0.69	1.92	195	2.23	2.15	183	1.93	3.58	148	2.55	3.93
대구시	172	0.29	1.49	173	1.49	2.27	147	0.42	1.85	141	0.99	2.67
인천시	167	0.76	1.78	213	2.04	2.38	171	2.02	2.87	170	2.03	2.06
광주시	133	0.64	1.52	155	1.13	1.77	131	1.22	2.55	121	1.03	1.64
대전시	174	0.79	1.61	140	2.31	2.36	129	1.02	1.27	130	0.92	1.51
울산시	116	0.13	0.55	126	1.68	2.88	110	1.73	3.22	105	1.62	3.31
계	1,283	0.63	1.64	1,404	1.81	2.30	1,223	1.54	2.74	1,151	1.77	3.02

주: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이며, 10점에 가까울수록 정치참여 정도가 높음. 분산분석 결과 조사기간 동안 청년들의 정치참여는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2018년 F값=4.04, p<.01, 2019년 F값=5.56, p<.001), 2020년 F값=7.63, p<.001, 2021년 F값=8.06, p<.001).

-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9세, 30~39세의 정치참여 정도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청년의 정치참여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표현이나 활동의 형태로 나타나고, 연령이 높을수록 선거로 정치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됨([표 4-13] 참고).
 - 2018년에는 30~39세, 19~29세의 정치참여 정도(각각 0.80점, 0.71점)가 높으며, 60~69세의 참여 정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조사결과에서는 19~29세, 40~49세, 30~39세의 정치참여 정도가 2.09점, 2.02점, 2.0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0~69세는 1.13점으로 가장 낮았음.
 - 2020년 조사에서는 30~39세(2.13점), 19~29세(1.91점)로 정치참여도가 높았으며, 60~69세의 참여 정도(1.11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조사결과 30~39세의 정치참여도가 2.0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50~59세 (1.84점), 19~29세(1.83점), 40~49세(1.76점), 60~69세(0.86점) 순으로 조사됨.

[표 4-13] 인천시 연령별 정치참여: 일반

(단위: 명, 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참여자 수	평균	표준 편차									
인천시	517	0.60	1.76	522	1.84	2.42	504	1.60	2.55	506	1.65	2.14
19~29세	80	0.71	1.91	107	2.09	2.53	88	1.91	2.90	81	1.83	1.95
30~39세	87	0.80	1.66	106	2.00	2.22	83	2.13	2.84	89	2.01	2.14
40~49세	120	0.54	1.68	122	2.02	2.43	98	1.55	2.49	88	1.76	2.15
50~59세	144	0.64	2.06	113	1.76	2.61	104	1.60	2.41	126	1.84	2.34
60~69세	86	0.29	1.20	74	1.13	2.12	131	1.11	2.15	122	0.86	1.85

주: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이며, 10점에 가까울수록 정치참여 정도가 높음. 분산분석 결과 2019~2021년 동안 정치참여는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편임(2019년 F값=2.26, p<.1), 2020년 F값=2.49, p<.05, 2021년 F값=6.37, p<.01).

(4) 사회참여

○ 인천시 청년들의 사회참여 정도를 조사함. 실태조사에서 시민사회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정도를 측정할 문항을 활용함.

- 시민사회조직의 참여 및 활동 여부는 ① 직장과 관련된 단체(노동조합, 사업자단체, 직업조합 등), ② 종교단체, ③ 동호회, ④ 시민단체, ⑤ 지역조직, ⑥ 동창회 또는 향우회, ⑦ 자선단체 등의 활동 정도에 대한 항목으로 측정함.

- 사회참여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측정함. 2018년은 0.542(특·광역시 청년), 0.559(인천시), 2019년 0.743(특·광역시 청년), 0.788(인천시), 2020년 0.781(특·광역시 청년), 0.756(인천시), 2021년 0.878(특·광역시 청년), 0.909로 확인됨⁵⁴⁾.

○ 사회참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구성방법은 다음과 같음.

- 5점 척도(0~4점)⁵⁵⁾로 구성된 8개의 항목을 활용함. 8개의 항목을 더한 후 32로 나누어 10을 곱하였음.

54) 변수들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 Alpha 값은 0.6 수준에서 수용가능한 것으로 설명함(DeHart-Davis, 2009). 2018년의 Alpha값은 0.6 미만임. 그러나 개념적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사회참여로 정의하므로 본 연구에서 사회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조직의 참여를 확인하는 변수를 활용함.

55) 사회참여에 대한 척도는 다음과 같음: “4점=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3점=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2점=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한다. 1점=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0점 소속된 적이 없다.”

- 0에 근접할수록 사회참여 정도가 낮고, 10에 근접할수록 사회참여 정도가 높음.
- 특·광역시 청년의 사회참여 정도는 서울시(1.18~1.37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임.
인천시 청년의 사회참여 정도는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인천시는 2019년(각각 1.33점)과 2021년 조사(2.73점)에서는 특·광역시 청년의 사회참여 정도 평균점수보다 높았으나, 2018년(0.90점), 2020년(0.81점) 조사에서는 평균점수보다 낮음.
- 4년간(2018~2021년) 진행된 조사에서 서울시와 인천시, 울산시를 제외한 특·광역시에서 2년 이상 특·광역시 청년의 평균 사회참여 정도보다 높은 지역은 없음.

[표 4-14] 특·광역시 청년들의 사회참여

(단위: 명, 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참여자 수	평균	표준 편차									
서울시	324	1.21	0.96	402	1.61	1.63	352	1.18	1.50	336	1.37	2.01
부산시	197	0.92	1.06	195	0.89	0.94	183	0.99	1.49	148	1.15	1.53
대구시	172	0.98	1.35	173	0.71	1.02	147	0.58	1.30	141	1.60	1.83
인천시	167	0.90	1.12	213	1.33	1.42	171	0.81	1.32	170	2.73	2.03
광주시	133	0.93	0.98	155	0.81	1.17	131	0.64	0.80	121	3.79	2.21
대전시	174	0.78	1.02	140	0.88	1.21	129	0.83	0.85	130	0.91	1.20
울산시	116	0.92	0.99	126	1.29	1.74	110	1.24	1.85	105	1.34	1.71
계	1,283	0.98	1.08	1,404	1.17	1.41	1,223	0.94	1.39	1,151	1.70	2.01

주: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이며, 10점에 가까울수록 사회참여 정도가 높음. 분산분석결과 2018~2021년 동안 청년들의 사회참여는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2018년 F값=3.86, p<.01, 2019년 F값=15.03, p<.001, 2020년 F값=5.85, p<.001, 2021년 F값=48.14, p<.001).

- 인천시 청년의 사회참여는 타 연령대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19~29세의 시민사회조직 참여 정도(0.70~2.73점)가 가장 낮으며, 30~39세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0.83~2.73점).
- 40~49세와 50~59세의 참여 정도는 2021년 조사를 제외하고 2018~2020년 3년 동안 인천시 평균 시민사회조직 참여 정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15] 인천시 연령별 사회참여

(단위: 명, 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참여자 수	평균	표준 편차									
인천시	517	1.02	1.08	522	1.76	1.82	504	1.09	1.46	506	2.73	2.41
19~29세	80	0.70	0.87	107	1.10	1.28	88	0.79	1.60	81	2.73	2.22
30~39세	87	1.08	1.28	106	1.57	1.51	83	0.83	0.95	89	2.73	2.20
40~49세	120	1.11	1.04	122	2.29	2.12	98	1.15	1.54	88	2.38	2.18
50~59세	144	1.07	1.04	113	2.10	2.05	104	1.47	1.62	126	2.45	2.39
60~69세	86	1.06	1.14	74	1.60	1.67	131	1.12	1.39	122	3.27	2.77

주: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이며, 10점에 가까울수록 사회참여 정도가 높음. 분산분석결과 2018~2021년 동안 연령별 사회참여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8년 F값=2.08, p<.1, 2019년 F값=7.96, p<.001, 2020년 F값=3.45, p<.01, 2021년 F값=2.44, p<.05).

- 특·광역시 청년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민사회조직은 동창회·향우회(1.939~2.416 점), 동호회(1.783~2.355점)이고, 가장 적은 조직은 시민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임. 이와 비교하여 인천시 청년은 직장조합(2019~2021년), 종교단체(2018~2019년, 2021년), 시민단체(2018~2019년, 2021년), 주민조직(2019~2021년), 사회적경제조직(2018년, 2020~2021년)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조사에서 인천시 청년이 특·광역시 청년보다 종교단체,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조직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19년 조사에서는 인천시 청년의 직장조합, 종교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주민조직, 동창회·향우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조사결과 인천시 청년은 직장조합, 주민조직, 자선단체, 사회적경제조직에 참여하는 비율이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021년 조사에서는 모든 조직에서 인천시 청년의 참여가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음.

[표 4-16] 특·광역시 청년들의 사회참여: 시민사회조직 참여

(단위: 명, 점)

구분	참여자수	직장조합	종교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주민조직	동창회 향우회	자선 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2018	서울시	324	1.148 (0.513)	1.633 (1.169)	2.244 (1.399)	1.028 (0.228)	1.167 (0.622)	2.373 (1.476)	1.247 (0.713)	1.019 (0.135)
	부산시	197	1.091 (0.442)	1.477 (1.100)	1.701 (1.211)	1.046 (0.308)	1.162 (0.626)	2.244 (1.499)	1.183 (0.578)	1.030 (0.266)
	대구시	172	1.081 (0.512)	1.169 (0.693)	1.895 (1.435)	1.052 (0.436)	1.209 (0.832)	2.494 (1.531)	1.174 (0.775)	1.058 (0.455)
	인천시	167	1.078	1.653	1.563	1.054	1.090	2.198	1.186	1.054

구분	참여자수	직장조합	종교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주민조직	동창회 향우회	자선 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0.380)	(1.270)	(1.084)	(0.368)	(0.489)	(1.381)	(0.700)	(0.443)	
광주시	133	1.143 (0.653)	1.624 (1.152)	1.895 (1.322)	1.038 (0.227)	1.045 (0.271)	1.925 (1.380)	1.286 (0.849)	1.015 (0.173)	
대전시	174	1.121 (0.507)	1.333 (0.862)	1.736 (1.226)	1.052 (0.406)	1.063 (0.343)	1.937 (1.369)	1.190 (0.630)	1.052 (0.361)	
울산시	116	1.216 (0.643)	1.397 (0.843)	1.595 (0.951)	1.017 (0.186)	1.086 (0.386)	2.552 (1.628)	1.060 (0.273)	1.017 (0.186)	
계	1,283	1.123 (0.517)	1.486 (1.063)	1.861 (1.292)	1.041 (0.318)	1.128 (0.566)	2.257 (1.478)	1.199 (0.679)	1.034 (0.304)	
2 0 1 9	서울시	402	1.321 (0.795)	1.736 (1.126)	2.154 (1.361)	1.418 (0.934)	1.398 (0.905)	2.353 (1.439)	1.470 (0.862)	1.316 (0.759)
	부산시	195	1.123 (0.492)	1.185 (0.580)	1.805 (1.253)	1.051 (0.348)	1.154 (0.640)	2.190 (1.400)	1.287 (0.696)	1.046 (0.341)
	대구시	173	1.081 (0.365)	1.410 (0.902)	1.503 (0.054)	1.023 (0.240)	1.081 (0.463)	1.751 (1.225)	1.382 (0.845)	1.052 (0.310)
	인천시	213	1.239 (0.761)	1.793 (1.330)	1.930 (1.288)	1.230 (0.706)	1.291 (0.771)	2.282 (1.372)	1.371 (0.851)	1.127 (0.530)
	광주시	155	1.142 (0.540)	1.587 (1.205)	1.613 (1.047)	1.052 (0.297)	1.142 (0.515)	1.723 (1.165)	1.258 (0.772)	1.090 (0.432)
	대전시	140	1.157 (0.626)	1.514 (1.063)	1.529 (1.083)	1.507 (0.394)	1.100 (0.469)	1.879 (1.283)	1.479 (0.985)	1.100 (0.499)
	울산시	126	1.397 (0.895)	1.587 (1.154)	1.833 (1.218)	1.246 (0.745)	1.317 (0.855)	2.230 (1.381)	1.317 (0.873)	1.206 (0.661)
	계	1,404	1.222 (0.686)	1.576 (1.098)	1.840 (1.249)	1.198 (0.670)	1.243 (0.733)	2.118 (1.369)	1.382 (0.844)	1.161 (0.575)
2 0 2 0	서울시	352	1.165 (0.672)	1.789 (1.259)	2.054 (1.384)	1.134 (0.615)	1.136 (0.583)	2.111 (1.401)	1.253 (0.756)	1.128 (0.583)
	부산시	183	1.164 (0.607)	1.350 (0.919)	1.885 (1.340)	1.131 (0.569)	1.169 (0.592)	2.060 (1.318)	1.251 (0.800)	1.634 (0.692)
	대구시	147	1.170 (0.686)	1.211 (0.714)	1.442 (0.930)	1.082 (0.446)	1.082 (0.476)	1.639 (1.144)	1.170 (0.623)	1.048 (0.376)
	인천시	171	1.304 (0.855)	1.374 (0.868)	1.544 (1.036)	1.076 (0.497)	1.193 (0.607)	1.567 (1.074)	1.357 (0.968)	1.175 (0.654)
	광주시	131	1.130 (0.487)	1.344 (0.926)	1.489 (1.048)	1.000 (0.000)	1.053 (0.286)	1.878 (1.253)	1.137 (0.477)	1.031 (0.276)
	대전시	129	1.047 (0.303)	1.349 (0.890)	1.806 (1.263)	1.008 (0.088)	1.039 (0.362)	2.109 (1.359)	1.225 (0.710)	1.602 (0.300)
	울산시	110	1.327 (0.814)	1.536 (1.055)	1.891 (1.207)	1.291 (0.871)	1.282 (0.825)	2.045 (1.252)	1.355 (0.819)	1.250 (0.744)
	계	1,223	1.183 (0.665)	1.479 (1.032)	1.783 (1.240)	1.105 (0.538)	1.137 (0.562)	1.939 (1.300)	1.251 (0.760)	1.123 (0.562)
2 0 2 1	서울시	336	1.307 (0.824)	1.464 (0.949)	2.211 (1.325)	1.241 (0.720)	1.313 (0.807)	2.310 (1.322)	1.298 (0.811)	1.229 (0.694)
	부산시	148	1.257 (0.784)	1.399 (0.981)	1.932 (1.210)	1.201 (0.793)	1.250 (0.781)	2.115 (1.317)	1.304 (0.870)	1.209 (0.776)
	대구시	141	1.213 (0.764)	1.525 (1.150)	2.035 (1.339)	1.262 (0.884)	1.227 (0.787)	1.567 (1.078)	1.298 (0.884)	1.270 (0.901)
	인천시	170	1.512 (1.022)	2.088 (1.263)	3.147 (1.322)	1.594 (1.041)	1.701 (1.139)	3.177 (1.237)	1.824 (1.127)	1.694 (1.066)
	광주시	121	2.157 (1.218)	2.306 (1.224)	3.107 (1.419)	2.223 (1.320)	2.248 (1.254)	3.223 (1.221)	2.504 (1.311)	2.347 (1.276)
	대전시	130	1.146 (1.146)	1.415 (1.025)	1.831 (1.359)	1.077 (0.442)	1.115 (0.538)	2.108 (1.354)	1.177 (0.603)	1.077 (0.406)
	울산시	105	1.257 (1.257)	1.305 (0.878)	2.343 (1.473)	1.229 (0.775)	1.200 (0.793)	2.543 (1.481)	1.219 (0.747)	1.190 (0.735)
	계	1,151	1.386 (0.923)	1.624 (1.111)	2.355 (1.418)	1.375 (0.921)	1.151 (1.418)	2.416 (1.388)	1.482 (1.001)	1.397 (0.927)

주: 소속 및 활동 정도를 묻는 항목으로 5점 척도 항목임. 1=소속된 적이 없다. 2=과거에 소속된 적은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3=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 4=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5=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평균은 특 광역시 평균임.

- 인천시민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민사회조직은 동창회·향우회(1.901~3.022점)이며, 종교단체(2018~2020년, 1.728~1.884점), 동호회(2019년, 2021년)의 참여정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청년의 사회참여는 연도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참여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임.
 - 청년들의 시민사회조직별 참여도를 살펴보면, 2018년 조사결과 30~39세는 동창회·향우회를 제외한 조직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19~29세는 주민조직에서만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에는 19~29세는 시민단체, 30~39세는 직장조합에 참여하는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020년에는 19~29세는 직장조합과 시민단체, 30~39세는 직장조합과 동호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타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 2021년 조사에서는 19~29세와 30~39세 모두 종교단체, 동호회, 동창회·향우회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9~29세의 경우 자선단체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17] 인천시 연령별 사회참여: 시민사회조직 참여

(단위: 명, 점)

구분	참여자수	직장조합	종교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주민조직	동창회 향우회	자선 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2018	인천시	517	1.112 (0.465)	1.884 (1.405)	1.515 (1.018)	1.060 (0.339)	1.155 (0.626)	2.248 (1.356)	1.203 (0.670)	1.072 (0.414)
	19~29세	80	1.038 (0.249)	1.363 (0.997)	1.438 (0.966)	1.038 (0.249)	1.167 (0.622)	2.175 (1.339)	1.113 (0.528)	1.013 (0.112)
	30~39세	87	1.115 (0.468)	1.920 (1.432)	1.678 (1.176)	1.069 (0.452)	1.162 (0.626)	2.218 (1.426)	1.253 (0.824)	1.092 (0.603)
	40~49세	120	1.200 (0.669)	1.842 (1.309)	1.483 (0.935)	1.050 (0.254)	1.090 (0.489)	2.383 (1.342)	1.242 (0.756)	1.075 (0.295)
	50~59세	144	1.090 (0.391)	1.972 (1.491)	1.569 (1.062)	1.083 (0.365)	1.045 (0.271)	2.278 (1.397)	1.201 (0.536)	1.076 (0.459)
	60~69세	86	1.093 (0.364)	2.244 (1.564)	1.372 (0.921)	1.047 (0.340)	1.063 (0.343)	2.105 (1.256)	1.186 (0.695)	1.093 (0.424)
2019	인천시	522	1.404 (0.952)	2.123 (1.522)	2.036 (1.387)	1.289 (0.816)	1.471 (0.964)	2.525 (1.453)	1.536 (1.068)	1.253 (0.780)
	19~29세	107	1.056 (0.359)	1.664 (1.259)	1.888 (1.313)	1.962 (0.665)	1.206 (0.710)	2.131 (1.353)	1.290 (0.777)	1.075 (0.381)
	30~39세	106	1.425 (0.985)	1.925 (1.392)	1.972 (1.268)	1.264 (0.747)	1.377 (0.822)	2.434 (1.380)	1.453 (0.917)	1.179 (0.644)
	40~49세	122	1.680 (0.208)	2.287 (1.582)	2.361 (1.494)	1.377 (0.973)	1.623 (1.145)	2.910 (1.510)	1.730 (1.266)	1.369 (0.972)
	50~59세	113	1.451 (0.954)	2.451 (1.637)	2.071 (1.474)	1.354 (0.915)	1.619 (1.055)	2.717 (1.467)	1.690 (1.203)	1.372 (0.937)
	60~69세	74	1.351 (0.867)	2.297 (1.602)	1.757 (1.259)	1.216 (0.647)	1.514 (0.925)	2.297 (1.412)	1.459 (0.982)	1.243 (0.718)
2020	인천시	504	1.276 (0.828)	1.728 (1.200)	1.589 (1.103)	1.060 (0.452)	1.339 (0.870)	1.901 (1.285)	1.387 (0.989)	1.204 (0.708)
	19~29세	88	1.284 (0.896)	1.401 (0.879)	1.466 (0.958)	1.136 (0.681)	1.273 (0.769)	1.443 (0.981)	1.341 (0.958)	1.182 (0.635)
	30~39세	83	1.325 (0.813)	1.337 (0.859)	1.627 (1.112)	1.012 (0.110)	1.108 (0.350)	1.699 (1.155)	1.373 (0.984)	1.169 (0.678)
	40~49세	98	1.429 (0.974)	1.867 (1.367)	1.653 (0.159)	1.040 (0.404)	1.224 (0.711)	2.010 (1.304)	1.276 (0.883)	1.184 (0.723)
	50~59세	104	1.240 (0.757)	1.837 (1.167)	1.187 (1.234)	1.115 (0.508)	1.433 (0.963)	2.317 (1.430)	1.587 (1.129)	1.346 (0.868)
	60~69세	131	1.153 (0.707)	2.000 (1.359)	1.412 (1.007)	1.046 (0.369)	1.542 (1.118)	1.947 (1.303)	1.351 (0.960)	1.145 (0.609)
2021	인천시	506	1.672 (1.169)	2.103 (1.341)	2.696 (1.388)	1.702 (1.157)	1.980 (1.249)	3.022 (1.256)	1.834 (1.179)	1.721 (1.108)
	19~29세	81	1.506 (1.026)	2.602 (1.288)	3.198 (1.298)	1.593 (1.070)	1.630 (1.156)	3.148 (1.246)	1.938 (1.099)	1.667 (1.025)
	30~39세	89	1.517 (1.024)	2.112 (1.247)	3.101 (1.349)	1.596 (1.019)	1.775 (1.126)	3.202 (1.236)	1.719 (1.148)	1.719 (1.108)
	40~49세	88	1.568 (1.206)	1.852 (1.282)	2.614 (1.368)	1.580 (0.991)	1.830 (1.127)	2.920 (1.271)	1.636 (1.106)	1.634 (1.044)
	50~59세	126	1.548 (1.078)	2.603 (1.390)	2.325 (1.344)	1.635 (1.204)	1.984 (1.239)	2.968 (1.193)	1.730 (1.113)	1.571 (0.999)
	60~69세	122	2.098 (1.428)	2.344 (1.413)	2.508 (1.386)	2.001 (1.321)	2.467 (1.356)	2.934 (1.328)	2.098 (1.326)	1.992 (1.269)

주: 소속 및 활동 정도를 묻는 항목으로 5점 척도 항목임. 1=소속된 적이 없다. 2=과거에 소속된 적은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3=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한다. 4=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5=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5) 정책참여

❖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분석

- 청년의 정책참여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설문문항으로 측정함.
 -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① 공청회/청문회 참여', '② 주민참여예산 활동'의 참여 활동 여부를 묻는 항목을 활용함.
 - ①번과 ②번 항목은 모두 2점 척도(1=참여, 0=불참)임.
 - 정책참여 변수의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 Alpha 값을 확인함. 2018년 0.518(특·광역시 청년), 0.669(인천시), 2019년 0.638(특·광역시 청년), 0.536(인천시), 2020년 0.378(특·광역시 청년), 0.547(인천시), 2021년 0.554(특·광역시 청년), 0.810(인천시)으로 많은 표본에서 내적 일관성은 약간 낮은 것으로 측정됨⁵⁶⁾.
 - 두 항목으로 정책참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표(① 세 항목을 합한 후, ② 2로 나누고 ③ 10을 곱함, ④ 0~10점)를 구성함. 10점에 근접할수록 정치참여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인천시 청년의 정책참여 정도는 0.00~0.41점으로 특·광역시 청년의 정책참여 평균(0.07~0.33점)과 비교하여 2018년을 제외하고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에는 광주시 청년의 정책참여 정도가 0.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울산시(0.00점)의 참여정도가 낮았음.
 - 2019년 조사결과 서울시와 울산시 청년의 정책참여가 0.22점으로 가장 높음. 부산시와 대구시(0.03점)의 참여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조사에서는 울산시 청년의 정책참여 정도가 0.18점으로 높았으며,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0.03점)의 참여 정도가 낮았음.
 - 2021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광주시(1.28점) 청년의 정책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시(0.00점)의 참여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56) Cronbach Alpha 값이 0.6 이상일 경우 변수의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일부 변수에서 일관성이 0.6보다 낮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질문은 개념적으로 시민의 정책참여를 측정한 항목이므로 정책참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에 활용함.

[표 4-18] 특·광역시 청년들의 정책참여

(단위: 명, 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참여자 수	평균	표준 편차									
서울시	324	0.11	0.83	402	0.22	1.39	352	0.03	0.38	336	0.24	1.26
부산시	197	0.00	0.00	195	0.03	0.97	183	0.03	0.37	148	0.17	1.08
대구시	172	0.00	0.00	173	0.03	0.85	147	0.03	0.41	141	0.00	0.00
인천시	167	0.00	0.00	213	0.16	1.17	171	0.12	0.93	170	0.41	1.92
광주시	133	0.23	1.04	155	0.13	0.69	131	0.08	0.87	121	1.28	2.46
대전시	174	0.11	1.07	140	0.18	1.32	129	0.12	0.76	130	0.24	1.37
울산시	116	0.00	0.00	126	0.24	1.27	110	0.18	0.94	105	0.14	0.84
계	1,283	0.07	0.67	1,404	0.15	1.04	1,223	0.07	0.65	1,151	0.33	1.48

주: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이며, 10점에 가까울수록 정책참여가 높음. 분산분석 결과 2018년과 2021년 청년들의 정책참여는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2018년 F값=2.73, p<.05, 2021년 F값=11.09, p<.001).

- 정책참여 정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9세의 참여정도가 0.00~0.37점으로 가장 낮음. 30~39세는 0.00~0.45점으로 2021년은 평균 수준으로 조사됨.
 - 2018년은 60~69세의 참여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조사에서는 40~49세, 50~59세, 60~69세의 참여수준이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30~39세와 19~29세는 평균 수준 이하인 것으로 조사됨.
 - 2020년 조사 결과 60~69세의 참여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40~49세, 50~49세, 30~39세, 19~29세 순임.
 - 2021년 조사에서 60~69세의 참여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30~39세, 40~49세, 19~29세, 50~59세 순으로 조사됨.

[표 4-19] 인천시 연령별 정책참여

(단위: 명, 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참여자 수	평균	표준 편차									
인천시	517	0.08	0.76	522	0.39	1.61	504	0.26	1.31	506	0.48	1.97
19~29세	80	0.00	0.00	107	0.05	0.48	88	0.11	1.07	81	0.37	1.73
30~39세	87	0.00	0.00	106	0.28	1.52	83	0.12	0.77	89	0.45	2.08
40~49세	120	0.04	0.46	122	0.57	2.05	98	0.26	1.32	88	0.45	1.80
50~59세	144	0.10	0.93	113	0.53	1.81	104	0.24	1.07	126	0.36	1.69
60~69세	86	0.23	1.31	74	0.54	1.56	131	0.46	1.80	122	0.74	2.38

주: 최소값은 1, 최대값은 40이며, 4점에 가까울수록 정책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함. 분산분석 결과 2019년 인천시민의 정책참여는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F값=2.14, p<.1).

2) 인천시 참여제도 청년참여 현황분석

(1) 위원회 청년참여 현황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위원회가 있음. 인천시에는 247개(2021년 3월 기준)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이나 정보제공 등을 함으로써 협의나 조정, 심의와 의결 등의 기능을 담당함(김정욱·안지선, 2021). 위원회는 특정 분야와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다양한 기관과 시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임.

•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함.

-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는 4,681명(2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중복하여 계산)이 참여하고 있음.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19~39세 위원은 6.67%(19~29세 0.7%, 30~39세 6.0%)로 타 연령대와 비교하면 비율이 낮은 편임.

• 50~59세가 2,290명(48.9%)으로 가장 많으며, 40~49세(23.2%), 60~69세(19.3%) 순임.

[표 4-20] 인천시 위원회 연령별 참여현황

(단위: 명, () 안은 %)

구분	권한과 기능			계
	자문	심의·의결	행정	
19~29세	15 (1.3)	17 (0.5)	-	32 (0.7)
30~39세	67 (5.7)	209 (6.0)	4 (9.5)	280 (6.0)
40~49세	244 (20.7)	830 (24.0)	14 (33.3)	1,088 (23.2)
50~59세	531 (45.1)	1,741 (50.3)	18 (42.9)	2,290 (48.9)
60~69세	283 (24.0)	617 (17.8)	5 (11.9)	905 (19.3)
70세 이상	38 (3.2)	47 (1.4)	1 (2.4)	86 (1.8)
계	1,178 (100.0)	3,461 (100.0)	42 (100.0)	4,681 (100.0)

주: 2021년 3월 1일 기준 위원회(총 247개) 자료이며, 중복위원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인천시 내부자료; 김정욱·안지선(2021)에서 수정하여 재인용함.

3) 청년참여 관련 기구 현황분석⁵⁷⁾

-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모두 인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음.
 - 청년들은 1.5~3년 정도 참여제도에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음.
 - 참여하게 된 이유나 계기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또래와의 소통과 교류가 가장 많았음.
 - 위원회나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는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하여 지원하게 된 것으로 조사됨.
- 인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이나 사업 등을 심의하는 기구임. 제2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15명 중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인천시 청년 8명이 위촉되어 참여하고 있음.

57) 인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또는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내용을 분석·정리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연간 1~2회 정도 개최되고 있음.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사소통, 의견수렴, 정책제안 등을 담당하는 청년네트워크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
-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정책을 기획 및 집행하기 위한 참여제도로서 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직면하는 문제나 정책개발 등을 위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나 문화 등이 형성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개최 빈도나 논의 시간의 보장과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관계자와 전문가 등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논의된 내용이 정책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한 다루어졌는지 설명하는 환류과정(feedback) 등이 필요해 보임.
 -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회와 위원의 역할이나 권한 등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지침(guideline)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위원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음.
- 청년네트워크는 2018년 5월에 조직됨. 1기와 2기에서는 취업과 창업, 참여와 권리, 문화와 예술, 주거생활안정 등의 네 가지 분과로 구성되었으나 3기에서는 취업과 창업이 분리되어 다섯 개의 분과로 운영되고 있음.
 - 3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의 규모는 1~2기와 비교하여 10배 이상 증가함. 참여규모가 커진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점은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참여의 헌신도나 심도 있는 논의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함.
 - 1기는 30명, 2기는 50명으로 구성되었고, 2022년 3월에 조직된 3기 네트워크는 532명이 참여하고 있음.
 -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규모나 조직의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500명 이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할 경우 논의조직과 참여조직으로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예를 들어, 청년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기능을 하는 논의조직과 제안된 정책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예를 들어 공론조사 방식으로 제안된 의견의 선호도 제시)하는 참여조직으로 구성함.

- 1기와 2기에서는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 네트워크 간의 의사소통을 직접하였으나 현재는 중간지원조직(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을 통해서 하고 있음. 거버넌스 구조가 단층(담당부서와 네트워크)에서 다층(담당부서, 지원조직, 네트워크)으로 변화하여 논의과정에 어려움이 생김. 특히, 지원조직은 담당자 한 명을 통해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
 - 청년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원활한 논의구조 및 과정을 위해 담당부서와 네트워크의 논의구조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인천시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음. 미추홀구(제물포), 부평구, 그리고 동구 등 세 곳에 설치되어 있음.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거주나 활동의 공간에 상관없이 청년들이 공간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구별 청년공간이 조성되는 것에 대한 수요가 있음.
 - 청년들의 이동특성이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청년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청년공간의 이용도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년들이 수요를 고려하여 (청년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면접조사에서 확인됨.
 - 청년공간 운영에 청년들이 참여하거나 청년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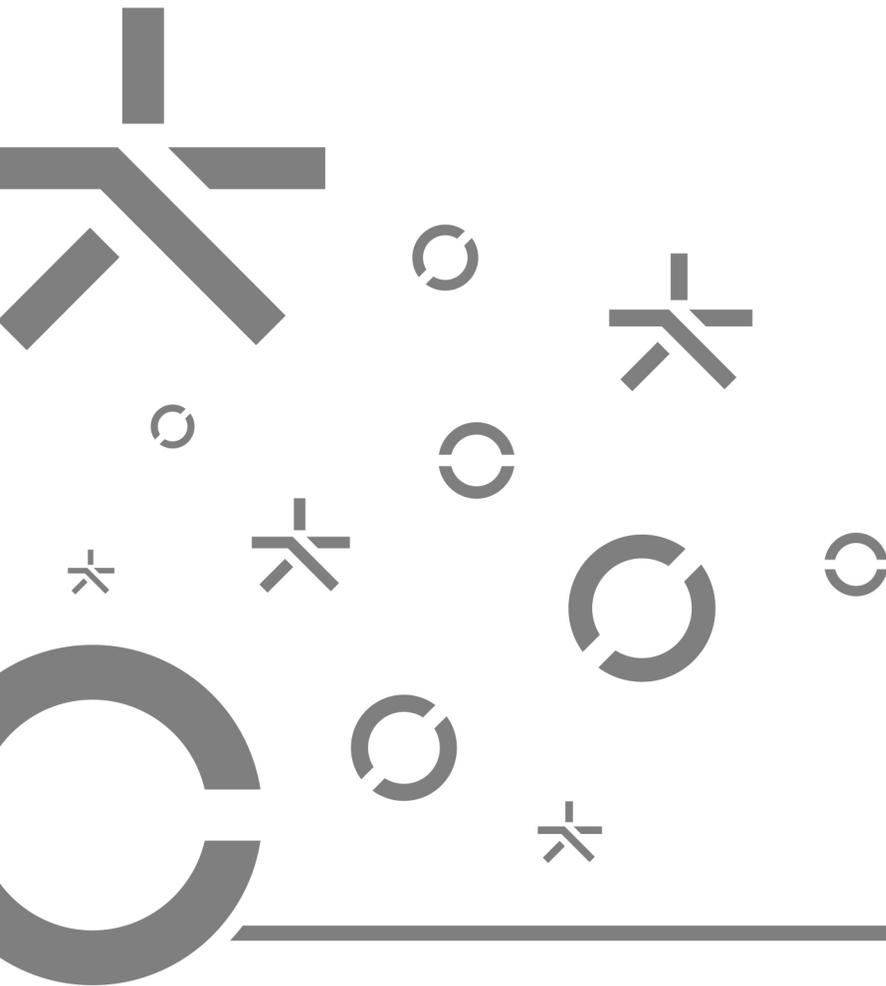
3. 소결

- 청년들의 참여 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조사 실태자료(2018~2021년, 4년)를 활용함. 참여행태는 정치참여, 사회참여, 정책참여로 구분하여 분석함.
 - 인천시 청년의 참여 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특·광역시 청년 및 인천시 타 연령대와 비교함. 실태조사에 인천시 청년은 167~213명이, 인천시민은 504~522명이 참여함.
- 인천시 청년은 정치참여의 측면에서 선거 및 정당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정치·사회 현안에 서명이나 의견제시, 시위참여 등의 방식으로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정치 및 사회현안 참여로 측정한 인천시 청년의 정치참여는 타 지역(〔표 4-12〕)과 타 연령대(〔표 4-13〕)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분석됨.
 - 정치 및 사회 현안에 대한 참여는 특·광역시 중 2.5위, 인천시 타 연령과의 비교는 2위와 1.8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선거참여 및 정당활동으로 측정한 인천시 청년의 정치참여는 타 지역(〔표 4-8〕)과 타 연령대(〔표 4-9〕)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시 청년의 선거 참여는 7개의 특·광역시 중 평균 5.3위(6.08~7.08점), 5개의 연령 구간 중 19~29세는 평균 5위(4.73~6.07점), 30~39세 평균 3.8위(7.30~8.39점)로 선거참여를 통한 정치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 인천시 청년의 정당참여를 통해 측정한 정치참여는 특·광역시 청년과 비교하여 2018~2021년 평균 4위로 중간 정도이며, 인천지역 타 연령과 비교하면 19~29세는 4위, 30~39세는 3.8위로 타 연령대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인천시 청년의 사회참여는 특·광역시와 비교하면 평균 수준(2018~2021년 평균 3.8위)이었으며,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참여도는 19~29세가 4.3위로 낮은 편이고, 30~39세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분석됨.
 - 실태조사에서 시민사회조직의 참여 및 활동에 관한 항목 등으로 측정함.
 - 인천시 청년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민사회조직은 동창회·향우회이며, 동호회와 종교단체에 대한 참여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4-16〕).
 - 특·광역시 청년과 비교하면 직장조합, 종교단체, 시민단체, 주민조직, 사회적경제조직에 참여하는 청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인천지역 타 연령대와 비교하면, 30~39세는 2018~2020년에 직장조합, 2018년, 2020~2021년 동호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연도별 인천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인천시 청년의 정책참여는 특·광역시 청년(0.03~0.24점)과 비교하면 활발한 편이나 (0.00~0.41점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면(19~29세는 0.00점~0.37점, 30~39세는 0.00점~0.45점) 인천시 평균(0.08~0.48)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실태조사에서 공청회나 청문회 참여, 주민참여예산 활동 정도 등의 항목을 활용함.

- 특광역시 청년과 비교하면 3위 정도로 참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9세의 정책참여는 4.5위, 20~39세는 3.5위로 조사됨.
- 인천시 청년의 정책참여 현황은 인천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와 청년정책 관련 제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네트워크)의 참여 현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음.
 - 인천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연령별 참여 정도를 분석함. 위원회 참여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나 대표성이 가장 고려되지만, 19~39세 청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6.67% 정도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 비율이 적은 편임.
 - 특히 19~29세 청년은 0.7% 정도로 매우 적은 비율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인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회와 네트워크 등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제도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논의 구조나 문화, 시간 등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논의 시간이나 빈도 등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논의 결과에 대한 환류과정이 필요해 보임.
 - 원활한 위원회 및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명확한 지침과 교육 등이 설계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청년네트워크의 참여 규모가 커진 만큼 논의 구조나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여 인천시와 청년 간의 충실한 논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의 소통 및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청년공간은 지역별로 조성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인천시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



인천시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

1.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

1) 청년 참여제도

- 인천시는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논의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의 기능은 다소 상이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청년 간의 소통·교류·논의를 위한 기구라는 점은 동일함.
- 지방자치단체와 청년 간의 소통·교류·논의를 위해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형식적이고 상징적이기보다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사업을 조정·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함.
 -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삶의 질 제고와 청년문제의 발견, 관련정책의 설계 등을 위한 청년들의 소통·교류 조직체임.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청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청년참여제도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된 청년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당사자인 인천시 청년, 청년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임.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임. 따라서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나 그 해결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 청년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먼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개최빈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⁵⁸⁾. 현실의 문제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결정 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2회 이상은 개최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와 제주도는 연 2회 이상, 광주시는 연 3회 이상 위원회 개최를 조례로 정하고 있음. 위원회를 2회 이상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되거나 위원장의 개최 필요성 제기, 위원의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해야 함(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 면접조사 결과,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위원들은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개최빈도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함.
 -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 중인 위원들도 분기별 1회 이상의 위원회 운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김정욱·안지선, 2021)⁵⁹⁾.
- 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과 공무원, 전문가 간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원활한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 시 개최시간이 2시간 정도 지속될 필요가 있음⁶⁰⁾.
- 위원회를 통한 청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의 정책반영 노력을 환류(Feedback)하는 차원에서 위원회에 공유할 필요가 있음⁶¹⁾.

58) 현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7월 현재까지 총 5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됨(연평균 1.5회 개최).

59) 분기별 1회 이상 위원회 개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응답자 646명 중 8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김정욱·안지선, 2021, 98쪽 [표 4-39] 참고).

60) 인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평균 1~2시간 정도로 개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높았으나, 보통이다(5점 만점에 3.13~3.15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음(김정욱·안지선, 2021, 86쪽 [표 4-18], 88쪽 [표 4-21] [표 4-22] 참고).

61) 인천시 운영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환류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2.5~33.1%로 가장 높았음(김정욱·안지선, 2021, 104쪽, [표 4-47], [표 4-48] 참고).

-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정책이 반영되진 않았지만 정책반영을 위해 어떠한 과정과 노력이 있었는지 등이 위원회에 공유된다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지역과 시민에 대한 책임과 보람에 기반하여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2) 청년네트워크

- 청년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소통·논의하는 조직임. 취업이나 창업, 참여, 주거, 문화 등으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 인천시는 2022년부터 청년들의 참여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수를 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함. 2022년 6월 현재 500여 명의 청년들이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음.
 -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함으로써 소수 청년들의 과대대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이나 쟁점들이 교류하고 논의될 수 있는 장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음.
- 청년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조직이나 예산 등이 확대된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음.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증가한 만큼 직영이나 민간위탁 등의 운영방식과 상관없이 청년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팀을 구성하거나 담당자를 충원할 필요가 있음.
 - 청년네트워크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청년네트워크에서의 논의과정을 충실히 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정책을 설계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체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청년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예산의 확대 없이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청년네트워크과 인천시청 담당부서 간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 2022년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네트워크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정책의 기획을 위한 논의 구조는 좀 더 복잡한 형태가 되었음.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담당자 1명이 청년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어 청년정책 논의나 교류 등을 위한 거버넌스를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임.

- 청년네트워크의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3단계의 거버넌스 구조(담당부서-창조경제혁신센터-청년네트워크)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은 상쇄될 수도 있을 것임.
- 청년네트워크를 헌신도, 관심, 역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정책을 구상하는 역할과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로 구분하여 운영하거나, 정책을 구상하는 역할과 제안된 정책에 공론을 제시하는 역할로 구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청년네트워크는 지역청년들이 경험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수립하는 등 충분한 관심이나 헌신, 시간의 투자 등이 필요한 참여제도임. 관심이나 헌신도, 참여역량 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위원들을 선발하거나 역할을 구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1안) 청년정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300~800명 규모의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함. 제시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100~200명의 청년들은 청년네트워크 분과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기획함.
 - 경상남도에서는 950명의 온라인 청년패널이 정책을 제안하고, 250명이 분과활동을 통해 논의 및 숙의과정을 가짐. 온라인 패널과 분과를 통해 제안된 정책을 정책자문단의 심사를 통해 정책을 제안함.
 - 2안) 관심과 헌신, 역량 등을 갖춘 100~200명의 청년들은 문제점이나 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청년네트워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함. 300~800명의 청년들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공론조사 방식의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함.

2) 위원회

-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다양성이나 민주성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음. 19~39세의 청년비율은 6.67%로 타 연령대와 비교하면 참여 정도가 낮음(김정욱·안지선, 2021).
 - 다만,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쟁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청년들의 위원회 참여

비율을 조건 없이 높이는 것은 지양해야 함. 청년들의 의견이 과대대표될 수 있기 때문임.

-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청년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인천시 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은 고민이 필요함. 일반위원회와 청년위원회 등에 이중참여가 될 수 있고, 과대대표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위원회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김정욱·안지선, 2021)인 만큼 전문성을 고려하며 위원회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 집단의 참여비율 확대는 지양해야 함.

3) 공간

- 공동이용공간은 지역주민 간의 교류와 소통을 발생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Kim, Jang, & Dicke, 2017)인 만큼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임.
- 인천시는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 참여 증진을 위해 청년센터마루를 운영하고 있음.
 - 2022년 현재 행정구역상 미추홀구, 부평구, 동구에 청년공간이 조성·운영되고 있음.
- 인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거주 및 활동 지역에 상관없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년들은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나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군·구별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설치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 등을 야간이나 주말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현재 조성된 인천시 청년공간은 시설별로 주중 저녁이나 토요일 등에도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좀 더 확대할 확의 여지가 있어 보임⁶²⁾.

62) 대표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주민자치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됨으로써 주중 저녁이나 주말에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메뉴얼을 통해 주중 저녁이나 주말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의 방식을 제시하거나 자율관리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서울특별시, 2018)). 청년들은 주중 저녁이나 주말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울시, 광주시, 경상남도, 제주도 등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해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권역별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조성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확인하여 청년공간을 조성하는 것, 기 조성된 공간은 공간 활용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 접근성과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빈집을 활용한 청년공간을 조성하는 것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청년공간의 조성뿐만 아니라 공간 이용도의 제고와 청년의 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공간에서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조성되는 공간인 만큼 청년들이 이용할 만한 동기요인이 있어야 할 것임.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으로 청년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청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간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4) 기타

-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청년공간의 이용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해 보임.
 - 시설 방문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공간 및 프로그램 접수뿐만 아니라 앱(Application) 또는 소셜미디어(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공간예약과 프로그램 접수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의 홍보나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네트워크)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거리나 시설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도 필요해 보임.

2. 연구의 한계

- 본 연구는 인천시 청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참여와 관련된 광역자치단체의 사례조사,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인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면접조사 등을 실시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방안은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사례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인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 참여자 면접조사의 결과를 고려한 것임.
 -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확률비례로 추출하여 설문조사 참여자의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사례조사는 청년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온 우수 사례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임. 또한, 면접조사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제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한 경험이 1년 이상이고, 청년참여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조사를 통한 정책대안은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해석하거나 정책방안을 적용하는 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의 실태조사나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년들과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 간에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사례조사 대상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은 인천지역의 상황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임.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미참여 청년들보다 상대적으로 지역사회나 시정에 관심이 많을 수 있는 만큼 청년정책과 제도 운영에 참고할 필요는 있음. 그러나 인천지역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청년들 전체에 대한 의견이 아닐 수 있고, 일부의 의견이 과대대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주제어 ▶ 청년정책, 참여,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참고문헌

■ 단행본/연구보고서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2022). 2021년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대표사례 모음집. 세종: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 김정욱·안지선. (2021). 인천시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인천: 인천연구원.
- 김태영. (2014). 자치행정과 도시거버넌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편). 도시행정론, pp.134-159. 서울: 박영사.
- 서울특별시. (201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 서울: 서울특별시.
- 이승종·김혜정. (2018). 시민참여론. 서울: 박영사.
- 주성수. (2004). 시민참여와 정부정책.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채종현·정소윤·박준·정동재·윤영근·조훈. (2019). 숙의기반 주민참여제도 도입: 자치단체 공론화 운영모델 구상.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Creighton, J. L. (2005). *The Public Participation Handbook: Making Better Decisions Through Citizen Involvemen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Denhardt. R. B. (2011). *Theories of Public Organization*. 6th edition. Boston, MA: Wadsworth.

■ 학술지/학위논문

- 송경재. (2020). 사회적 자본은 시민참여를 강화하는가?: 사회적 자본과 투표참여, 시민단체참여를 중심으로, *NGO연구*, 15(2), 1~30.
- 하상근. (2018). 사회적 자본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및 정치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0(4), 909~937.
- Bingham, L. B., Nabatchi, T., & O'Leary, R. (2005). The New Governance: Practices and Processes for Stakeholder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5(5), 547~558.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DeHart-Davis, L. (2009). Green Tape and Public Employee Rule Abid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9(5), 901~901.

- Kim, J. W., & Jang, H. S. (2017). Why Do Residents Participate in Neighborhood Associations?: The Case of Apartment Neighborhood Associations in Seoul, South Korea, *Journal of Urban Affairs*, 39(8), 1155–1168.
- Kim, J. W., & Jang, H. S., & Dicke, L. A. (2017). The Civic Health Generated By Neighborhood Associations in Seoul, Korea: A Consider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Advocacy Roles, *Journal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39(4), 543–576.
- Musso, J., & Weare, C. (2017).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Representation: How Multifunctional Networks Promote Local Democracy in Los Angeles, *Urban Studies*, 54(11), 2521–2539.
-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erspective*, 4(13), 1–11.
- Putnam, R. D. (1993).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Talo, C., Mannarini, T., & Rochira, A. (2014). Sense of Community and Community Particip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7, 1–28.
- Thomas, J. C. (2013). Citizen, Customer, Partner: Rethinking the Place of the Public in Public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3(6), 786–796.
- Yang, K., & Pandey, S. K. (2011). Further Dissecting the Black Box of Citizen Participation: When Does Citizen Involvement Lead to Good Outcom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1(6), 880–892.

■ 관련 법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경상남도조례 제4154호). 2016. 12. 10. [제정]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경상남도조례 제4958호). 2021. 5. 3. [일부개정]
-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경상남도조례 제4973호). 2021. 6. 3. [제정]
-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5647호). 2021. 2. 25. [일부개정]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4617호). 2015. 12. 28. [제정]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광주광역시규칙 제3278호). 2022. 4. 26.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12호). 2015. 1. 2. [제정]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695호). 2010. 10. 5.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353호). 2022. 3. 1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696호). 2020. 10. 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697호). 2020. 10. 5. [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478호). 2022. 5. 12.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6361호). 2020. 3. 3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5937호). 2018. 2. 26. [제정]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6611호). 2021. 6. 4.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6757호). 2022. 1. 13.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6830호). 2022. 5. 2.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규칙 제3245호). 2022. 5. 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30호). 2016. 9. 23.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607호). 2020. 8. 1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944호). 2021. 11. 23.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118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757호). 2022. 4. 19. [일부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91호). 2019. 4. 16. [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8. [타법개정]

청년기본법(법률 제16956호). 2020. 8. 5. [제정]

청년기본법(법률 제18433호). 2022. 2. 18. [일부개정]

■ 행정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0.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광주광역시. (2017). 2017~2021 청년도시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광주광역시. (2022.0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022년 시행계획.

광주광역시. (2022.02). '청년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2022~2026).

경상남도. (2019). 2019~2023년 경상남도 청년정책기본계획.

경상남도. (2021.0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021년 시행계획(변경).

경상남도. (2021.10). 경상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22~2026년).

경상남도. (2022). 2022년 경상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미래청년기획단. (2021.12). 2025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

미래청년기획단. (2022.02). 2022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청년청. (2020). 서울청년센터(YC) 오랑 안내서.

서울혁신기획관. (2015.11).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인천광역시. (2020.09). 2020년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인천광역시. (2020.09). 인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년~2024년).

인천광역시. (2021.05). 2021년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인천광역시. (2021.12). 「인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계획(안)(2021년~2025년).

인천광역시. (2022.01). 2022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인천광역시. (2022.02).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인천광역시. (2022.04). 2022년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제주특별자치도. (2019.04). 제주 청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1차 보완, 2019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22.01). 2022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한국행정연구원. (2018, 2019, 2020, 2021). 사회통합실태조사.

■ 보도자료/신문기사

고보현. (2021.12.02).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사실상 폐쇄 수순... "기성세대만 챙기냐" 비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2/1110476/> (검색일: 2022년 7월 20일)

고성식. (2021.06.09). [제주소식] 제주도, 청년친화현정대상 평가 3년 연속 종합대상.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9067000056>(검색일: 2022년 7월 1일)

서울문화재단. (2020.07). 청년에게 활력을 불어넣다: 청년 .테마토크 7월호 '청년예술인의 놀이터, 서울'. <http://magazine.sfac.or.kr/html/view.asp?PubDate=202007&CateMasterCd=200&CateSubCd=2405>(검색일: 2022년 7월 20일)

안승진. (2022.06.17). '중구난방' 청년공간, 청년센터로 일원화 추진.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616526110>(검색일: 2022년 7월 20일)

인천광역시. (2022.05.08). 청년정책 정보가 한 곳에, 인천청년포털 서비스 개시.

인천도시공사-인천광역시. (2020.12.18).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온라인 좌담회 개최.

정창남. (2022.03.25). 광주 청년들과 함께 꿈꾸는 미래, 제7기 광주시 청년위원회 출범. 시민일보.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99399038746>
(검색일: 2022년 7월 22일)

■ 전자문서자료/홈페이지

광주광역시. <https://www.gwangju.go.kr>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포털. <https://2030.go.kr>
경상남도. <https://www.gyeongnam.go.kr>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https://youth.gyeongnam.go.kr/youth>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https://sygc.kr/intro>
서울청년센터 오랑. <https://youth.seoul.go.kr/site/orang>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https://youth.seoul.go.kr/site/youthnet>
서울청년포털. <https://youth.seoul.go.kr>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시대. <https://youth.seoul.go.kr/site/youthzone>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https://youth.seoul.go.kr/site/bridge>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https://youthhub.kr>
인천광역시. <https://www.incheon.go.kr>
인천광역시 청년센터마루(동구). <https://uudong.kr/>
인천광역시 청년센터마루(부평). <https://inuu.kr/bp/index-b.php>
인천광역시 청년센터마루(인천). <https://inuu.kr/index-j.php>
인천청년포털. <https://www.incheon.go.kr/youth>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https://youthpolicy.kr>
제주청년센터. <https://jejuyouth.com>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

2022년도 기획연구

인천시 청년 참여 현황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행인 이용식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발행처 인천연구원

인쇄처 청송출판인쇄사

I S B N 979-11-6870-070-3 93330

주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 인천연구원 202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